



2014 통일포럼

UNIFICATION FORUM 2014

일 시 · 2014년 9월 30일(화) 09:00~15:3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통일, 기업에 길을 묻다”

PROGRAM BOOK

주 최 | 아시아경제신문, 아시아경제팩스TV

후 원 |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 통일포럼

UNIFICATION FORUM 2014

“통일, 기업에 길을 묻다”

CONTENTS

- | Program
- | Opening Remarks
- | Welcome Address
- | Keynote Address
- | Session 1
- | Session 2
- | Session 3
- | Session 4
- | Survey

아시아경제 □
통인
포럼
2014년

Program

시 간	프 로 그 램	
08:30 - 09:00	VIP Tea Time	
09:00 - 09:20	개 막 사	이세정 아시아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
	환 영 사	정종욱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 인천대학교 석좌교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09:20 - 09:40	기조연설 1	김진경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총장
09:40 - 10:00	기조연설 2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Session 1 통일한국에서 길을 찾다 '남북경협 27년'		
10:00 - 10:20	발 표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10:20 - 10:40		정기섭 (주)에스엔지 대표이사, (사)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10:40 - 10:50	휴 식	
Session 2 북한진출 성과와 과제		
10:50 - 11:50	발 표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11:50 - 13:00	오 찬	
Session 3 통일한국을 위한 대북경협확대 방안		
13:00 - 14:00	발 표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Session 4 통일한국의 경제적 시너지효과는?		
14:00 - 14:20	기조연설 3	류길재 통일부 장관
14:20 - 15:30	좌 장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토 론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원장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기섭 (주)에스엔지 대표이사, (사)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아시아경제 □
통인
포럼
2014년

Opening Remarks



최 상 주
아시아경제신문 대표이사 회장



이 세 정
아시아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

'2014 통일 포럼'을 찾아 주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정종욱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님,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진경 평화과학기술대학교 총장님,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통일, 기업에 길을 묻다'입니다.

'통일, 금융에 길을 묻다'와 '통일, 국부펀드에 길을 묻다'에 이어 올 들어 아시아경제신문이 개최한 통일관련 세 번째 포럼입니다.

아시아경제신문은 올 초 '통일'이라는 키워드로 모두 세 번의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통일기반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통일은 정치와 이념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라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통일 이후 15년 동안 약 20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통일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유럽의 경제 강국, 독일이기에 가능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도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통일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한국경제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열린 포럼에서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제 금융 전문가들은 금융 인프라 구축과 통일비용조달 방안, 남북한 화폐통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막대한 자원 마련을 위해 투자유치 등 국부펀드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기업의 역할에 대해 듣는 자리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강국으로 이끈 국내 기업들에게 통일의 의미와 과제를 묻고, 또 그들이 제시하는 통일 방정식의 해법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패널로 나오신 많은 분들이 통일시대, 기업의 역할과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남북통일, 한반도 통일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가야할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아시아경제가 마련한 '통일포럼'이 향후 통일시대를 재촉하는 촉매제로서, 또 통일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포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경제신문 최 상 주, 이 세 정

Welcome Address



정종욱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
인천대학교 석좌교수

| 학 력

미국 예일대학교 정치학 박사

| 경 력

현재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
현재 국립 인천대학교 석좌교수 겸 중국학술원 원장
주중 대사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외교부, 통일원, 국방부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21세기 위원회 초대 간사위원
한국 사회주의 연구협의회 회장
미국 예일 대학교 정치학과 전임강사
아메리칸 대학교 조교수
클레몬트 메키나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등에서 강의

| 저 서

Maoism and Development, Major Power and Peace in Korea

Welcome Address



윤 상 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학 력

미국위스콘신대학교대학원 법학 박사 S.J.D
 미국위스콘신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LL.M.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서울대 무역학과 학사

| 경 력

2013.03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1.05 - 2013.03	지식경제부 1차관
2010.03 - 2011.05	대통령 지식경제비서관
2010.02 - 2010.03	기획조정실장
2009.08 - 2010.02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2009.02 - 2009.08	산업경제정책관
2008.03 - 2009.02	자원개발정책관
2007.08 - 2008.02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대위원회 국장(파견)
2006.08 - 2007.07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동아시아법제연구소(국장급 해외연수)
2006.02 - 2006.08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2005.01 - 2006.01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00.01 - 2005.01	산업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수출과장, 디지털전자산업과장
1982.03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Keynote Address 1



김진경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학 력

국립충북대학 명예 교육학박사
송실대학교 명예 철학박사
미국 Berean대학 철학박사
영국 Clifton대학원 졸업
송실대학교 졸업

| 경 력

2001 - 현재 평양과학기술대학 총장
1992 - 현재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총장
1989 - 현재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정부 경제고문
1987 - 1991 중국사회과학원 초빙교수

| 수 상

2002.10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1995.08 대한민국 서울시 명예시민
1995.03 KBS해외동포상 수상

2014 통일포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September 30th, 2014



남과 북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합니다

평화는 값을 지불해야 온다

Peace comes with a price

김진경 총장 | 연변과기대 · 평양과기대



I'm not Capitalist, I'm not Communist. I'm loveist.

(나는 자본주의자도 아니요, 공산주의자도 아니요, 오직 사랑주의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일에 저는 개인적으로 큰 희망과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서 기초강연을 하게 된 것은 저에게 더없이 큰 영광이며, 귀한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여 주신 위원회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결의 시대, 증오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민족은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포럼을 계기로 남과 북이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는 새로운 범국민적인 화합운동이 과거와는 달리 남북사회에서 연속성을 가지며 보다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원합니다.

최근 빈번히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면 동아시아는 평화와 번영을 이루게 될 것이며 남북의 여러 문제와 북한 핵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동아시아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와 유대는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동아시아의 정치 외교적 지도력이 절실한 이 때에 남과 북의 지도자가 평화공존을 이룩하는 역할에 앞장서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역사적 시간에 남과 북의 문제를 다시 고민해 봅시다. 어제를(과거를) 접어 두고 현재와 미래를 향한 대안과 대책을 협의합시다.

I. 남과 북은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남과 북은 지나간 분단 70년의 과거사를 접어 두고 현재와 미래를 향한 무조건적인 대화를 시작합시다. 남과 북이 서로를 탓하며, 과거사를 논쟁하면 앞으로 100년이 더 간다한들 양금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히려 더 큰 괴로움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조건 없는 대화야말로 민족적 차원에서 남과 북 양측이 반드시 이루어 내야만 할 일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사의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부강한 국력으로 글로벌 경제개발 경험이 많은 남쪽 사회가 먼저 다가감이 마땅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북쪽도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래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등 대외관계를 풀어야 할 절실한 단계에 처해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여 저들의 입장과 자존을 살려주면서 민족의 화해를 도모하는 남쪽의 넉넉한 마음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첫째, “영원히 이끌고 갈 범민족적인 화해와 화합정책을 세워야합니다.”

역대 대통령께서는 저를 청와대에 초청해 주셨으며, 그분들을 뵙는 자리에서 연변과 평양에 건립한 대학과 관련하여 많은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큰 보람이며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그 때마다 대통령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5년 임기를 의식하시어 임기 내에 조급한 성과를 내려는 정치적인 대북 정책을 세우시지 마시고, 영원히 이끌고 갈 범민족적인 정책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풍요로우며, 모든 것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은 통일에 대하여 그다지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통일이라는 민족의 화합과 화해를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역사의 절대적 사명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음을 보면서, 저는 크나 큰 좌절감 속에 우리 민족의 장래를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지금과 같은 대결상태를 지속한다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어려운 것이며 우리나라의 미래 또한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상황으로 민족공멸의 위기가 올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정책의 시행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과 북이 화해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 간다면, 엄청난 풍요를 누리는 부강한 국가로 나아가는 지정학적 중요성에 비취보더라도 아시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은 서로가 하나된 조국을 형성하는데 보탬이 될 풍부한 자원과 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쪽은 강력한 중화학 산업구조 등으로 부강한 경제력을 구축해 왔으며 특히 전 세계가 경외의 눈으로 부러워하는 한국의 IT기술, 지혜와 민첩함을 바탕으로 하는 우수한 인적파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북쪽 또한 다양하면서도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가운데 순수함과 근면한 성품의 주민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을 구축해낼 창조적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의 시간은 결코 우리를 무한히 기다려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둘째, 북쪽의 인프라 구축과 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남과 북은 우리의 민족자산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선시는 인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실크로드와 연결되며, 또한 수심이 100m에 달하는 천혜의 항구로 태평양-캐나다-미국을 향하고 중국과 몽고, 극동러시아 물류의 전진기지로 국내외 지역을 망라하는 최적의 물류 요충지로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오랜 우리의 역사 속에 중국과 러시아가 언제나 탐을 내던 항구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수 천 년 동안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온 보물이었습니다.

북측은 나선지구를 경제자유화 할 시기에 저를 통해 이곳에 남쪽의 기업과 사회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가 있으나, 남북관계의 경직된 환경으로 인해 한국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나진항의 1, 2, 3항만 중 제1항만은 중국이, 제3항만은 러시아가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곳에 대부분의 기반을 구축하고 동해를 통한 태평양 진출기지를 확고히 다져 놓았습니다. 남측에 대한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관광 폐쇄 등 남북관계의 악화로 나선(나진, 선봉)항을 남과 북이 공동개발 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우리민족의 후손들을 위하여 북측의 소중한 자산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남쪽 기업들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을 북측의 내심을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인식하여 이제는 협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셋째,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 Union)형성이 해당, 남북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저는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유럽공동체 형성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영국의 처칠수상과 프랑스 드골대통령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을 그대로 두면 또 3차 대전을 일으킬 것이니 독일을 유럽 국가들에게 귀속시키고 독일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자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후 독일의 현명한 새 지도자들은 철두철미한 회개 가운데 600만 명의 유대인을 희생시킨 악행에 대하여 유대인과 전 세계에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유대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독일을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유대인은 거의 없으며, 국제사회도 독일의 진실한 회개와 반성의 진정성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진정한 반성과 응당한 대가의 지불로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포용을 허용 받았으며, 이를 통해 경제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하였습니다. 독일에 대한 용서로 유럽공동체(EU)는 형성되었고 그로부터 독일은 EU의 중심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바라보는 동아시아국가들과 국제사회는 일본도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고,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신뢰 회복하여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조차 EU형성이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리라 판단하였으나, 유럽에는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면 용서”하는 문화가 있어, 유럽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유럽 정치지도자들은 이 지혜를 리더십으로 오늘의 유럽공동체인 EU가 형성되어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럽공동체 형성이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음을 알고는 우선하여 유럽의 대학간에 학생들의 자유로운 교류를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정치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오늘의 EU는 탄생되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정신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시아의 문화인 자비와 은혜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려 간다면,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돌아온 저는 1960년대에 부산의 지인들과 함께 고신대학교를 설립하고 1980년대에는 중국 길림성에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유럽공동체가 먼저 대학에서 비자 없는 자유로운 교류를 기반으로 교육, 경제, 정치로 이어지며 Union이 이루어졌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사업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의 “교육교류협력사업”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북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과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건립과 운영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넷째, 한국국민들과 경제, 시민, 문화 단체들이 북한을 자유로이 방문토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의 시민들이 민족애에 바탕을 두어 서로 도우며 화해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동질성은 신속히 회복될 것이며, 지난간 70년간의 상처 또한 신속히 치유될 것이고, 자유로운 만남은 남과 북의 화합의 길이 될 것입니다.

통일의 정책적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여야 하지만 통일의 모든 과제는 정부만이 감당할 일은 아닙니다. 경제주체와 사회 문화 교육주체도 함께 움직여야만 합니다. 정부가 직접 하기 어려운 영역의 협력 사업을 민간차원에서 활성화 시키면 북한의 이해와 국제지향성은 그만큼 빠르고 넓어지며 안정적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업주체들의 북한 진출이야말로 남과 북의 사회가 화해 협력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출은 북한이 시장경제를 통해 협업과 창업을 통한 생활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고 집단생산단위(생산 공장)의 생산성을 극대화 시키므로, 남과 북의 시민들이 평화에 대해 통일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또 다른 남과 북의 협력, 협업은 창출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남북의 화해 협력사업을 위하여 광범위한 분야의 자유로운 교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북쪽의 산업구축과 자원개발에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산업기반 구축과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투자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남북의 분단은 장구한 민족역사 속에서 보면 잠깐 머물렀던 순간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나의 땅을 사상이라는 이념과 정치적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민족의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크나 큰 과오를 남기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 북측 정부는 저에게 나진 개발을 위한 토지와 나진항의 항만개발권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저는 나진에 “동북아과학기술대학” 설립을 계획하여, 학교건물을 설계하고 나선항구 개발 또한 적극 추진하는 등 한국정부를 비롯 여러 기업들과 진지한 개발 협의를 계속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정상회담 성사에 일조하며, 이 회담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의 디딤돌이 되기를 열망하였으나, 예기치 않은 김일성 주석의 서거로 안타깝게도 많은 일들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은 거듭된 정치, 군사적인 대립으로 참으로 아까운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대화의 단절로 틈이 벌어진 최악의 상태에서 북쪽의 자원개발과 산업기반 구축에 제3의 국가들이 그들의 인력과 그들의 기업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우리 당대에는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무한한 가치를 지닌 민족적 자산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북쪽의 산업구축과 자원개발에 한국사회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산업기반 구축과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투자가 과감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적정지역에 “남북공동SW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경제협력사업을 새롭게 제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쪽의 세계적인 대기업과 탄탄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저렴한 초기 투자비용과 기존 인프라, 인력 등을 감안하면 남북 경제협력에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남북 협력사업의 또 하나의 가능한 예는 황폐해진 북한의 산림을 복구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민간차원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이미 한국사회의 일각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산림복구에 앞장을 서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하나로 연결된 남북의 생명선을 위협하고,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남북한 사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하기 손쉬운 사업으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 화해를 향한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림복구 사업에는 본인이 총장으로 있는 평양과기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각종 묘목의 모종, 산림녹화 계획, 녹화관리자 교육사업 등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경제주체들, 건강한 사회단체들이 남북경제협력에 있어 진취적인 용단과 결단에 앞장서도록 한국정부의 지원과 격려가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한편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주도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환경조성을 이루어가면서 이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유도하면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섯째, 평양과학기술대학과 같은 북한의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훈련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인은 평양과기대를 건립 운영해온지 4년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설립한 연변과기대의 운영은 22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평양과기대는 남북사회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양질의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 정부의 허가와 승인 하에 공동으로 운영해 온 대학입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12개국에서 부임한 석학들과 해외 교포 교수 등 100여명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우수한 북쪽 청년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미 유럽과 중국으로 유학하여 공부하는 학생도 다수입니다.

금년 5월 석사과정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금년 가을에는 학사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특히 석사과정 학생들의 대부분은 북한 전역의 최우수대학에서 선발되어온 우수한 학생들로서 향후 북한을 이끌고 갈 산업인재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대학의 R&D센터는 남쪽 기업들이 진출할 경우 협업 혹은 창업센터가 될 것입니다.

II.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은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세우는 것으로 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한반도 분단의 원인제공자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입니다. 해방이후 6.25 전쟁으로 인해 민족 간에 서로 원수가 된 이 슬픈 역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결의 결과는 전쟁이고 전쟁의 결과는 공멸뿐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전쟁은 악인 것입니다.

혁명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대결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전쟁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분단 7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남북은 서로를 대표할 대표부가 없습니다. 상호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대화가 단절되면, 관계를 복원하는데 수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더 큰 진전을 위해서 저들을 품고 가는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과거사의 본질과 문제점을 잊거나 묵인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상호간의 입장과 자존을 살피자는 것입니다.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절대적인 공통의 요구입니다. 남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는 화해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것은 우리의 자신감이며 민족의 긍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남과 북이 협의 한 후 6자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6자회담을 통해 남북문제를 먼저 논의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환경조성을 해야 하는 일이 그리 단순치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은 반드시 남북 당사자간에 이루어 내어야 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기적을 이루는가. 그 일은 오직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 주의자가 됩시다. 사랑이라는 절대 가치만이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중국의 시인인 노신(魯迅) 선생의 시 한 귀절이 떠오릅니다.

“~~度尽劫波兄弟在，相逢一笑泯恩仇” / 아무리 어려운 충돌과 재난을 겪어도 형제는 형제이니 서로 한번 만나 웃으면 지난날의 원한은 사라지리 /

남과 북이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상처 입은 마음들을 웃음 지으며 만나 보면, 그 고통도 사라질 것이라는 시인의 간절함이 저의 가슴을 적시며 우리 민족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남과 북의 문제는 정치적 정책만으로는 결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민족의식의 동일성과 역사의식에 바탕을 둔 “한반도 민족동질성 회복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지도자간에 진정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슬을 풀고, 현재와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서로를 보듬어 이해하고 존중하는 한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남북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한민족공통의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 이 시간 저는 우리나라와 민족 앞에 사랑주의를 선포하며, 사랑주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연변과학기술대학 • 평양과학기술대학

총장 김진경

Keynote Address 2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 학 력

독일 만하임대 경영학 박사
독일 만하임대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문학과 졸업(석사)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 경 력

2013 한국철도공사 사장
2007 한국철도대학 총장
2005 한국철도공사 초대 부사장
2004 철도청 차장
1997 한국철도대학 운수경영학과 교수

| 주요저서

2013 벤츠 베토벤 분데스리가
2006 시베리아횡단철도 '잊혀진 대륙의 길을 찾아서'

2014 통일포럼 "통일대박, 기업에 길을 묻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대륙철도 연결과 철도의 미래



2014. 9. 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한국철도공사

대륙철도 연결과 철도의 미래

1 철도기업 코레일



115년, 국민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국민행복 코레일

<p>1899 경인철도 개통 한국철도의 시작</p>	<p>1972 산업선 전기기관차 운영 등, 산업발전의 중추로서 역할 이행</p>	<p>2004 경부선 KTX 1단계 개통으로 시속 300km 시대를 열다.</p>	<p>2013 중부내륙 철도관광벨트개통</p>	<p>2014 KTX 개통 10주년 4억14백만명 이용</p>
<p>1905 경부선 개통 겨레의 대동맥으로 역할을 시작</p>	<p>1974 수도권 전철 개통</p>	<p>2005 105년의 역사를 거쳐 철도공사로 재탄생</p>	<p>2013. 10. 2. 제6대 최연혜 사장 취임</p>	

2 사회공공재로서의 철도의 역할과 영향력 대륙철도 연결과 철도의 미래



국민의 “**발** (공공운송업)” 이 되어온 철도, 이젠 사회전반의 영향력 확대

운송사업

KTX 1일 15만명
일반열차 1일 20만명
광역 1일 267만명
화물 1일 9만톤

>> **열차와의 융합으로 생활 경제권 확장**

철도와 관광의 접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편하게 즐기는 오지의 속살... 주말 방문객 500여명 '복직'

코레일 관광열차 덕분에... 한적한 시골마을 살아났어요

경춘선 개통 효과 특목, 춘천 아파트값 24% 올라
춘천 아파트가 '경춘선 열차'로 인해 상승세를 보인다고 나타났다.

경기동북부 지자체 "고마워! 경춘선 복선 전철"
고양시 등 11개 지자체가 경춘선 복선 전철 개통을 환영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3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대륙철도 연결과 철도의 미래



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과 한국을 철도를 통해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



- 주요개념**
- 1 하나의 대륙: 교통, 물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거대 단일시장 형성
 - 2 창조적 대륙: 창조경제추진으로 유라시아 지역을 전 세계의 성장엔진으로
 - 3 평화의 대륙: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으로 경제통상과 문화교류의 큰 장벽인 평화와 안보위협 해결

4 철도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넘어 통일까지 대륙철도 연결과 철도의 미래 **KORAIL**

독일 철도의 선례, 대한민국 철도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과정에서 같은 역할을 할 것

» 1970년, 통과교통 조약을 통해 철도로부터 독일 통일의 발걸음 시작

독일 통일정책의 교훈, 교통연결과 교류

-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교류와 협력의 역사로 전환
- 정치적 통일을 넘어 동질성의 회복을 위해 **철도의 역할이 특히 중요**



독일 통일교통 프로젝트(VDE)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해 70년~72년
철도도로 프로젝트 진행,
철도 9개 사업에 202억 유로(23.3조)
도로 7개 사업에 172억 유로(19.3조)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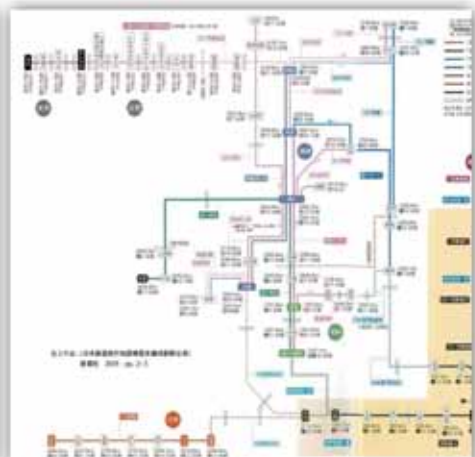


독일 분단서 통일까지

<p>1945년 8월 14일 독일 2차 대전이 종전된 후 북·남 2개 국가로 분단, 서독과 동독으로 국경 설정</p>  <p>1949년 9월 11일 서독-미국간 항공운송 개시 1950년 12월 15일 동·서독간 항공운송 개시 1951년 12월 15일 동·서독간 항공운송 개시 1953년 8월 15일 동·서독간 항공운송 개시</p>	<p>1953년 8월 15일 동·서독간 항공운송 개시 1953년 8월 15일 동·서독간 항공운송 개시 1953년 8월 15일 동·서독간 항공운송 개시 1953년 8월 15일 동·서독간 항공운송 개시</p> 	<p>1953년 8월 15일 동·서독간 항공운송 개시 1953년 8월 15일 동·서독간 항공운송 개시 1953년 8월 15일 동·서독간 항공운송 개시 1953년 8월 15일 동·서독간 항공운송 개시</p> 
---	---	---

5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역사의 순환 대륙철도 연결과 철도의 미래 **KORAIL**

1913년 철도로 이미 하나 되었던 유라시아가 다시 연결되기 위한 노력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 | | |
|--|---|--|
| <p>1913년</p> <p>• 시베리아 경유, 유럽
주요도시까지 여객과
수소화물 연락운송 개시</p> | <p>1937년</p> <p>• 시베리아 경유, 유럽
주요도시까지
화물 연락운송</p> | <p>1940년</p> <p>• 동경~파리(13,735km) 14일 소요
• 부산~파리(12,400km) 12일 소요</p> |
|--|---|--|

*출처: 동북아 국제교통의 시간과 공간 (1940년) 정재정 교수
*출처: 철도주요연표(2010년)

6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출발점, 한반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유일한 Missing-Link에서 출발점으로 탈바꿈, 유라시아 모든 국가에 유무형 효과 창출



- ▶ 철도는 중앙아시아 국가 등 유라시아 국가의 경제와 교역의 중심(내륙국가의 한계)
- ▶ 해운에 비해 높은 시간경쟁력과 안정성으로 리드타임 감축이 요구되는 고도화된 경제에 보다 큰 효과 창출
- ▶ 독일철도(DB AG)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2011년부터 독일 라이프치히~중국 선양간 컨테이너 운송투트를 개척하고 정기열차 운행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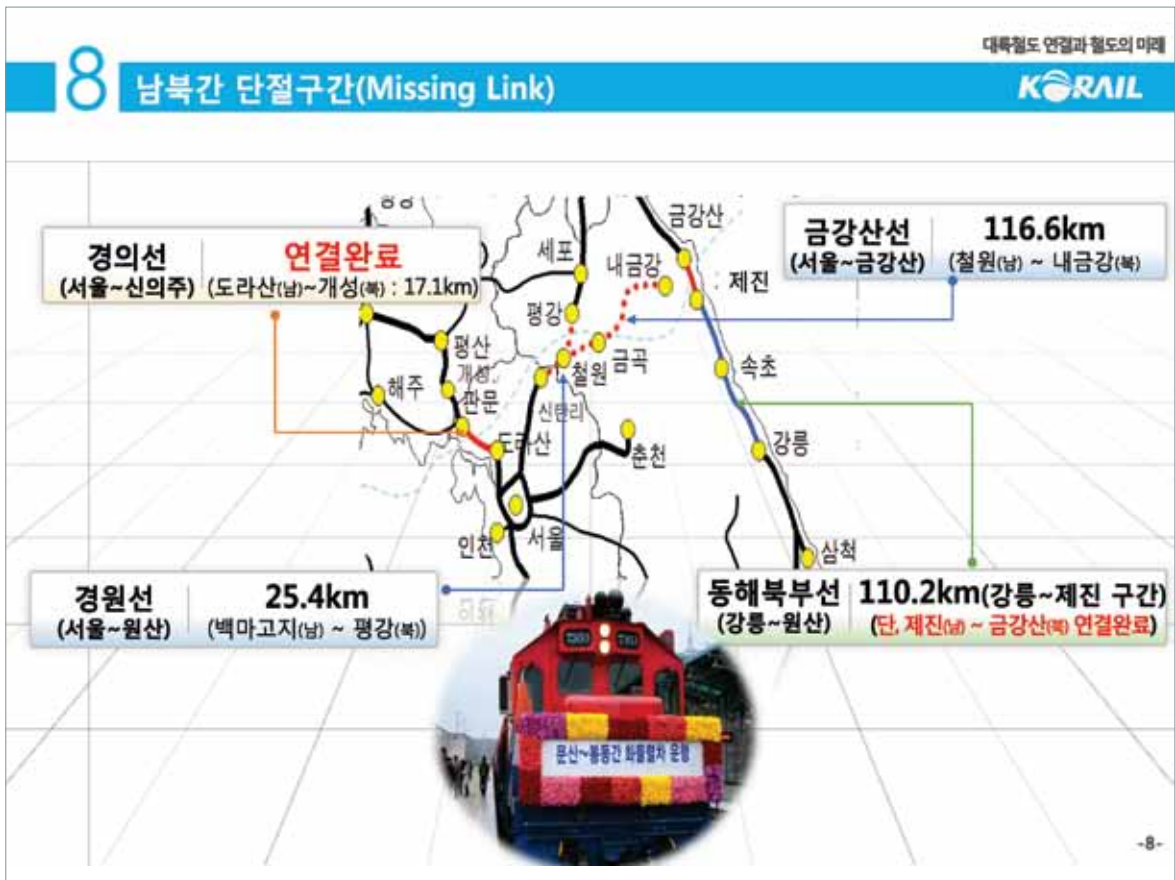
-6-

7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위한 선결과제



남북철도의 연결은, 대륙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육지의 섬'에서 대륙을 연결하는 "랜드 브릿지(LAND BRIDGE)" 역할로 한반도를 동북아 국제운송 거점으로 발전

-7-



10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코레일의 노력

대륙철도 연결과 철도의 미래



남북 철도운행(07~08년) 이후 나진~하산 프로젝트(13년), OSJD 가입과 열차방북(14년) 등 한국철도의 계속된 노력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 ▶ 2013.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
- ▶ 2013.1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 ▶ 2014. 3월 대통령 "드레스덴 제안"



코레일의 후속조치

- ▶ 2013.10월 대륙철도 네트워크 연결 구상
- ▶ 2013.11월 "나진~하산" 물류협력 MOU 체결
- ▶ 2014. 3월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현의 교두보 마련
- ▶ 2014. 4월 평양개최, OSJD 회의 참석
'15년 OSJD 물류회의, '19년 OSJD 사장단 회의 서울 유치



-10-

11 나진-하산 물류사업

대륙철도 연결과 철도의 미래



2013. 11월 나진-하산 물류협력 MOU 체결 이후 현재 사업참여 검토 중

'00 나진~하산 프로젝트 공동개발 합의(러시아 ↔ 북한간)

'08 同 프로젝트를 진행을 위해 北나진지역에 북러합작회사 나선콘트란스 설립

프로젝트 사업영역

- 나진~하산 간 철도 개보수(54Km)
- 나진항 3호 부두 및 나선특구 개발/운영 (08년부터 49년간)



-11-

대륙철도 연결과 철도의 미래 **KORAIL**

12 OSJD(Organization for the Cooperation of Railways) 현황 및 의의

OSJD, 1956년 창설하여 정회원 27개국과 제후회원 철도회사 40개가 참여

- OSJD 회원국들은 TSR과 TCR 등 28만km 노선에 200만대의 화물열차를 운행
- 통관방법, 운송협약 등을 27개국 40개 철도회사와 동일하게 체결한 효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연결을 위해서는 OSJD 회원자격이 필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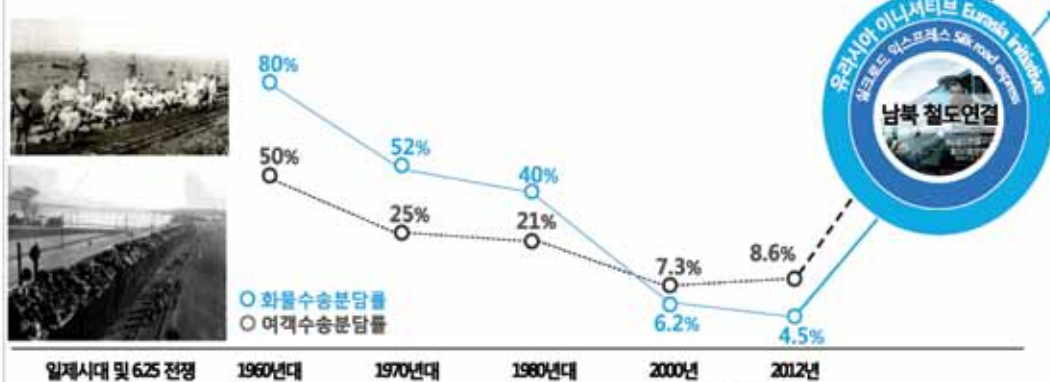
-12-

대륙철도 연결과 철도의 미래 **KORAIL**

13 철도, 경제개발의 원동력에서 다시 유라시아의 원동력으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철도가 산업화에 결정적 역할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연결로 철도가 다시 대한민국 제2도약의 원동력 역할을 할 것



연도	화물수송분담률 (%)	여객수송분담률 (%)
일제시대 및 6.25 전쟁	80%	50%
1960년대	52%	25%
1970년대	40%	21%
1980년대	7.3%	6.2%
2000년	8.6%	4.5%
2012년	-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Eurasia Initiative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SRX Silk Road Express
 남북 철도연결

* 60~80년대 : 정재장 "한국의 철도역사" / 한국철도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 00년, 12년 : 국토교통통계(국토교통부)

-13-

14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의 미래

대륙철도 연결과 철도의 미래



철도와의 연계를 통한 기업들의 대륙 진출 활성화 및 시너지(synergy)효과를 기대



-14-

15 앞으로의 과제

대륙철도 연결과 철도의 미래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과제

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학계의 지원이 필요



OSJD 정회원 가입

정회원국인북한의반대로 2000년대부터기업무산 체회회원기업의문고를연만큼 정회원가입의정부노력필요



남북 철도사업 지원

나산-하산프로젝트, 남북철도은행제, 북한철도 현대화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정부,경제계,학계의 지원필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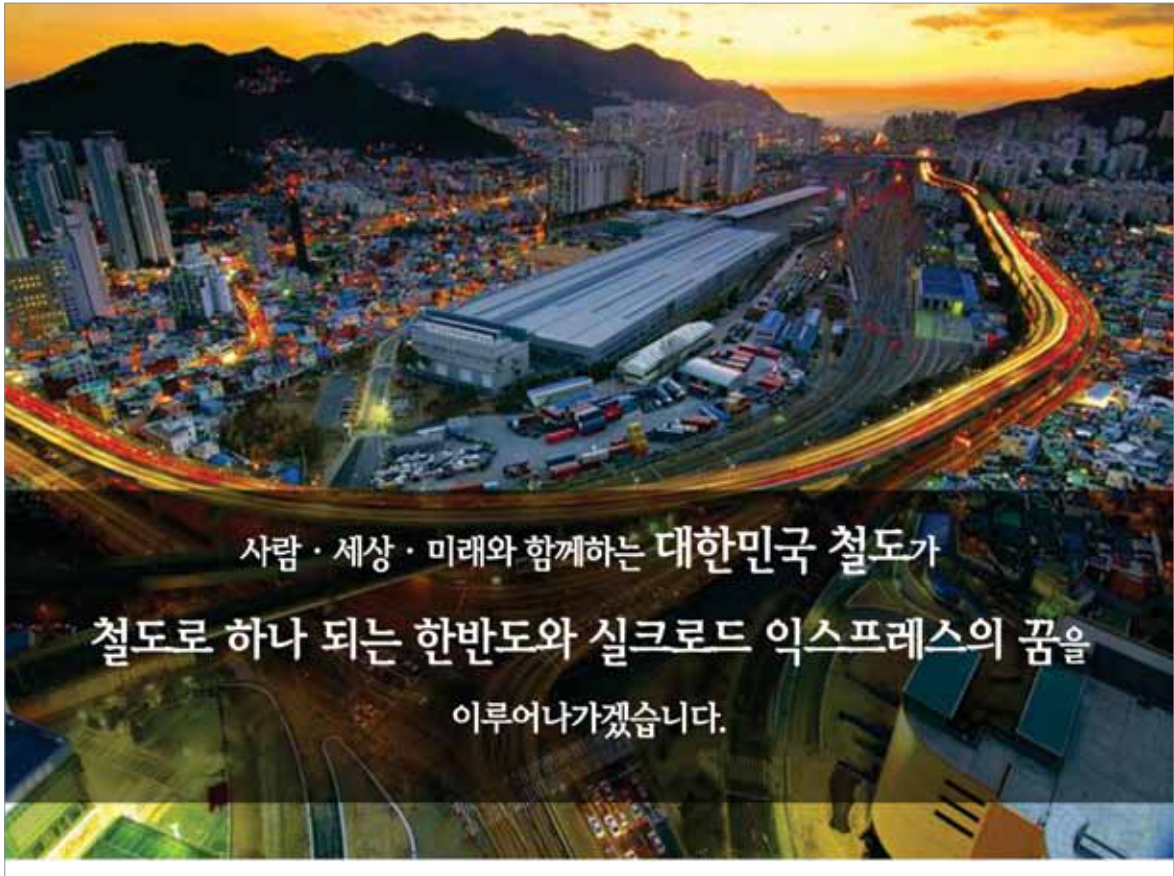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연결필요성경제적효과철도운영 효율적연결방안 등 학계의활발한연구필요



국제적 협의체 구성

정부차원의 철도심무협약체를 구성하여 향후동북아철도장편의로 발전시켜 동북아철도망구성관련 주요정책결정

-15-



사람 · 세상 · 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가
철도로 하나 되는 한반도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꿈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아시아경제 □
통인
포럼
2014년

Session 1

통일한국에서 길을 찾다: '남북경협 27년'

[Presentation]

김 창 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정 기 섭 (주)에스엔지 대표이사, (사)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Presentation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 학 력

연세대학교 본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취득 (국제경영전공)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입유형과 성과에 관한 연구 - 경제위기 전후 인수와 신설투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본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취득 (국제경영전공)
중국 길림吉林대학 경제관리학원 국민경제관리학과 졸업 (경제학 학사)

| 경 력

2004.03 - 현재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수석연구위원, 수석연구원
2013.12 - 2014.03 포스코경영연구소 북방연구반 반장대리
2006.06 - 2012.12 포스코경영연구소 친디아저널 편집위원, 편집인
2014.05 - 현재 전경련 통일경제위원회 자문위원
2012.01 - 현재 북경대 한반도문제포럼 자문위원
2011.07 - 현재 길림대 상학원 겸임교수
2010.11 - 현재 중국 서안西安교통대 경제금융학원 겸임교수
2008.10 - 현재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객좌교수
2011.05 - 2014.04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단둥시 지부 자문위원

| 기 타

국내외 학술지 게재, 세미나 발표 및 저서 수록 논문 20여 편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서울신문, 매일신문, 한국철강신문 등 언론사 칼럼 기고 50여 편
한경비즈니스, 이코노미플러스, 친디아저널(포스코경영연구소) 등 저널 기고 50여 편
MBC, TV조선, KBS1라디오 등 언론 방송 인터뷰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esentation



정 기 섭

(주)에스엔지 대표이사, (사)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 학 력

동국대 법정대 정치외교학과

| 경 력

2014.04 – 현재 (사)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2013.03 – 2014.03 (사)개성공단기업협회 수석부회장
2008.07 – 현재 (주)에스엔지 개성공장 (연건평 4,500평) 준공
2005.05 – 현재 금강이업종교류회 회장
2002.07 – 현재 대전의류산업협회 회장
1981.11 – 현재 (주)에스엔지 설립, 현 대표이사

| 수 상

2004.03.03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2001.04.02 노동부장관 표창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을 위한 제언

2014.9.2.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기섭

□ 개성공단사업의 태생적 한계

개성공단사업이 착수 된지도 만 11년이 다 되어간다. 북측 군부대가 이전한 히히벌판에 공단개발이 시작된 이래 11년이 흘렀지만, 2006년에 개발 완료된 1단계 100만평 중에서도 현재 57%의 부지가 빈터로 남아있는 것에서 드러나듯 개성공단사업은 시작시의 2,000만평 규모로 개발하겠다는 master plan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표류중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공단사업은 정치적 논리나 관점이 아닌 경제적 논리와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으나, 개성공단사업은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표류하다가, 지난해에는 6개월간이나 문이 닫히는 최대의 위기를 맞기도 했었다.

남북당국이 발전적 정상화를 합의하며 166일 만에 재개된 개성공단은 입주기업들의 당시 기대와는 달리 재가동 1년이 되어가는 오늘에 와서도 발전적으로 진전된 것이 별반 없다. 또한 북측 당국은 현 정부가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입주기업의 어려운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나마 수입을 증대하려 함인지 세무, 임금 등에서 일방적인 압박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북측당국의 일방적이고 Global Standard에 상치되는 각종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 입주기업들은 추가투자를 부기한 보류하고 상황변화의 추이를 관망중이다. 특히 천안함 사태로 우리 정부가 취한 5.24조치로 추가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꽉 막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사태 이전에 125개의 입주기업중 약 40% 정도의 기업들이 의미있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냈었지만, 그것이 개성공단의 향후 미래를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고 오르는 임금과 부족한 인력문제, 타 경쟁국에 비해 높은 복리후생비, 미국과 일본에 수출을 할 수 없는 꽉 막힌 해외판로로 내수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는 개성공단의 명확한 한계로 다가온다. 오히려 개성공단은 향후 새로운 방향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 내 실패한 공단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

남북의 분단 상황과 군사적 대치라는 특수한 현실 때문에 개성공단은 향후에도 정치와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고 철저히 경제논리만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측 통치권하의 공단에서 남측기업들이 기업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는 없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정상적이고 협조적인 것으로 조성, 관리해 가지 않는 한 입주기업들의 어려

움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데, 지난 수년간 공단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은 미온적 이었다

향후, 개성공단의 국제화 및 활성화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경제적 시각에서 공단 사업이 추진 운영될 수 있도록 북측당국과 큰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하고, 우리 정부도 정치군사적 상황변화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정경 분리의 큰 틀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청사진과 장기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당국간 합의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개성공단의 국제화 및 발전의 걸림돌은?

2단계 착수 전 공단 현안에 대한 종합적 협의가 선행되어, 현재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개성공단을 “들어오고 싶은 공단”, “중소기업의 판로가 될 수 있는 공단”으로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야 만이 개성공단의 미래를 밝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1단계가 분양완료 되었지만 공장 건축이 완료되어 가동 중인 부지는 43%에 불과한 실정으로, 5.24조치로 인해 신규투자 및 기업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이지만, 5.24조치가 없었다고 인력부족 등 개성공단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신규 진출 기업 수는 초기 예상보다는 큰 폭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 된다

▲ 개성공단의 문제점

- ① 5.24 조치
- ② 노동력 부족
- ③ 인사, 노무 제도로 인한 저생산성
- ④ 인사, 노무, 세무 등의 제도에서 Global Standard와의 큰 차이
- ⑤ 원산지 문제로 인한 수출 불가능
- ⑥ 중국, 동남아 대비 단위당 투자액 과다
- ⑦ 금융활용의 제약
- ⑧ 미래에 대한 예측경영 불가능

따라서 현존하는 개성공단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거나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계획했던 2·3단계로의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그만큼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며, 특히 Global Standard와 동떨어진 기업 경영환경 하에서는 외국기업들의 입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당국 간 현안에 대한 협상이 있게 되고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에 대한 실무협의를 있을 때 다음 사항들이 선행 추진되어야 한다.

① 5.24 조치의 완화 내지는 해제

현재 5.24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신규투자는 원천적으로 막혀있다.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의 시설교체가 가능할 뿐이고 신규투자는 금지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근로자 숙소를 입주기업들이 건설하는 것도 5.24조치의 변화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 국내기업(입주기업포함)에게는 공단 내 투자를 금지하면서 외국기업에 투자를 허용한다는게 가능하겠는가? 개성공단 국제화가 가능하려면 5.24조치에 대한 완화 내지는 해제가 불가피하다.

시행당시 당위성은 있었지만 4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박대통령의 대북구상을 뒷받침하기위해서도 이제는 재검토,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5.24조치의 제도 수정이 불가피하며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활성화도, 발전도 불가능하다.

② 노동력 부족

노동력 공급에 관한 북측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받되 공단 내 업체별 배분단계에서는 북측 당국이 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대표와 함께 사전협의 하여야 노력배분의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기과제로는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도로 개·보수 등으로 원거리 근로자를 확보하고, 출퇴근버스 증차 등으로 수송능력 확충을 확충하며, 경의선 철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성의 지역의 노력공급을 위한 합숙소의 건설로 버스 및 철도로 수송이 불가능한 원거리 근로자 확보가 절실하며, 합숙소 건설은 북측 생활수준을 감안해 현 중국수준으로 건설해야 한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건설비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동일 예산대비 수용규모는 3배 이상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숙소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운영경비 부담 문제 등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이 사전에 검토 및 협의되어야 한다. 여러 여건상 정부의 기숙사 건립이 계속 지체된다면, 몇 개 기업씩 협동하여 수용 규모 5,000명 미만의 기숙사 건설을 북측로 추진하되, 인프라 지원 측면에서 정부가 장기적리의 금융지원을 하는 것도 실권 가능한 방안임.

③ 저생산성 극복방안

생산성 향상이 개성공단 발전내지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공동과제임을 북측도 공감하도록 해야 하는 바, 현 상황을 동남아공단 등과의 객관적인 비교수치를 확인시켜 자료로 제시하고 저생산성의 주요배경인 현 개성공단의 노무관리·인사·작업배치 등 노무시스템을 개선하여 각 기업별로 자율적인 현장 운영을 가능케 해 생산성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외국공단에서의 노무관리 제도와 비교하여 북측의 정책결정자들이나 실무자들이 어떻게 해야 공단의 경쟁력을 그들보다 더 올릴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노무, 세무, 보험, 상사분쟁 등의 제도에서 Global Standard와의 큰 차이

시장경제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측 관계자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키워야 한다. 중국이나 동남아의 공단을 함께 시찰, 견학하되 기업관계자를 필히 동반해 공단운영의 내부 메카니즘에 있어 개성공단과의 차이점을 충분히 깨닫도록 한다.

개성공단의 노무, 세무, 보험, 상사분쟁 등의 제도가 Global Standard에 어떻게 상치되며 그러한 문제들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 정도가 어떠한지, 향후 초래되는 결과가 어떨지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기준과의 괴리문제가 북측의 공단관계 실무자(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는 물론 상위 정책결정이 가능한 상급 고위직과도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되, 남측의 대화 상대자도 경제부처의 고위직으로 변경되는게 필요하다.

⑤ 원산지 문제로 인한 수출 불가능

현재 개성공단 생산품의 수출 비중은 가동 초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FTA체결국이 늘어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미 FTA, 한-EU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위원회를 열어 해외판로 확대를 기대했으나, 그 협상 진행이 더더 언제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대로 해외판로가 막힌다면, 공단의 국제 경쟁력 확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FTA관련 정례협이나 추가 협상시 개성공단 문제를 FTA준속에 대한 필수 보완사항으로 제기하여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단순히 몇 개의 생산품을 지정하는 문제가 아닌, 개성공단이 경제특구를 지향하고 남북경제통합의 상징을 가지는 만큼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개성공단의 발전과 나아가 국제화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⑥ 중국, 동남아 대비 단위당 투자액 과다

공장 건축비에 대한 투자액은 감가상각비, 금융비용 등의 원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전시효과를 의식한 나머지 개성공단에는 남측의 최신 건축 및 환경 관련 규정이 적용되다보니 당연히 남측수준 이상의 건축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바, 경쟁대상인 중국이나 동남아 수준을 감안해 합리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측의 인력과 건축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해외 경쟁국 수준의 공장 건축도 허용하는 등 기준을 완화한다면 투자액을 줄이는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⑦ 금융활용의 제약

국내투자는 물론 중국과 동남아, 해외 투자 시에도 현지에서 투자비의 상당부분을 금융권에서 차입할 수 있으나, 개성공단의 고정자산은 금융권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투자비 조달에 문제가 크다.

남북협력기금대출이 2007년부터 중단된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등을 그 보완대책으로 시행했으나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되고 개성공단의 지속가능여부가 의문시되면서 금융권 속성상 개성공단 자산의 담보가치는 실질적인 면에서 거의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자산 가치를 인정하는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국내 금융권의 담보대출 비율이 60% 이상인 것에 비해 30~40%의 가치만이 반영되어 입주기업들의 금융비용 증가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키워 공단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개성공단의 가치, 즉 남북관계의 개선, 긴장 완화, 평화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감안하고 남북경제협력력이 언젠가 먼 미래에는 실현 되어야 할 통일에 대비할 때, 통일비용에 대한 전문학적 규모의 절감효과를 고려해보면 정부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기업들의 투자비용 조달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⑧ 미래에 대한 예측경영 불가능

예측가능성 여부는 기업의 투자결정시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 인데, 남북 간의 정치, 안보적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의 미래는 예측불가능의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다. 남북측 당국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채널 구축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할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큰 틀에서 움직이며 개성공단이 그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경협·교역보험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위험부담을 완화,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기업들을 위한 보험이 아닌 단순한 해외투자보험을 본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경협·교역보험은 반드시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북측당국의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중대한 악영향이 초래될 때는 부득이 자진철수를 하더라도 보험적용이 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제 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성공, 실패를 개별기업의 임의선택에 의한 것이니 개별기업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견해는 개성공단의 특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편견이다.

즉,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전반에 주고 있는 순기능과 먼 미래, 통일한국이 될 때까지의 역사적, 경제적 가치를 간과하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본성상 영리를 추구하여 개성에 투자하였지만, 여러 번의 위기와 6개월간의 가동중단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수년간 개성공단에서의 기업 활동을 존속 유지해온 것만으로도 그 어느 공기업 못지않게 상당한

공공적 기능¹⁾을 해왔음을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국, 베트남 등의 해외 진출 국내기업과는 달리 개성공단 기업들은 필요한 원부자재 및 기업 소모품을 전량 국내에서 구매하여 개성에서 소비하는 형태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원부자재 및 기업소모품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산업 구조 고도화의 연착륙을 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국내에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에게 활로가 될 수 있고, 최근 중국, 베트남 등지의 경영환경 악화 및 기업규제 강화로 갈 곳이 없어진 중소기업들에게 U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효율적 대안으로 활용해야한다.

결론으로 어떤 정책이든 득과 실이 있다. 북의 군사적 도발을 제재하기 위한 5.24조치가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판단기준 보다는, 5.24조치가 지속됨으로써 득과 실 어느 쪽이 더 큰가를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때이다. 북에 대한 제재효과도 미미한 5.24조치를 지속하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이 가능 하겠는가? 남북관계가 딱 막힌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동일은 대박이다” 라는 대통령의 말씀도 진정성이 없는 정치적 수사로 실추되지 않겠는가?

남북관계의 개선이 전제되지 않고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발전적 정상화도, 드레스덴선언도, 통일대박을 향한 긴 세월 장기적 추진과정의 시작조차도 모두 불가능하지 않은가?

1) 남북평화유지 기여, 남북리스크 완화에 따른 국가신인도 향상 등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아시아경제 □
통인
포럼
2014년

Session 2

북한진출 성과와 과제

[Presentation]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남 성 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이 재 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Presentation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학 력

영국 워릭 대학교 경제학부 (PhD of Economics)
 영국 워릭 대학교 (University of Warwick) 경제학부 (MSc of Economics)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경 력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현재	KDI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현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현재	통일부 자문위원
현재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민간위원
현재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남측 위원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10 – 2013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팀장
2007.03 – 2007.07	헝가리 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초빙연구원
2005 – 2006	통일연구원 학술정보센터 소장
2003 – 2008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995 – 1996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 경제 분석관
1989 – 1995	장기신용은행 자금운용부 주식/채권 펀드 매니저
1988 – 1989	석사 장교 근무 (대한민국 육군 소위 전역)

현 단계 북한경제 분석: 실태와 정책

2014. 9. 30

| 이 석

Korea's Leading Think Tank

KDI

I. 실태 - 데이터로 구성한 스냅샷

1. 인구



<표> 총인구, 1946 ~ 2008 (북한 공식 통계, 단위: 천)

	합계	남성	여성
1946	9,257	4,629	4,628
1960	10,789	5,222	5,567
1970	14,619	7,127	7,492
1975	15,986	7,433	8,553
1980	17,298	8,009	9,289
1985	18,792	8,607	10,185
1993	21,214	9,678	10,845
1995	21,819	10,634	11,185
1996	22,114	10,782	11,332
2000	22,963	11,201	11,762
2003	23,310	11,305	12,004
2008	24,052	11,722	12,330

Source: KDI Collection of DPRK Statistics

3

1. 인구



<표> 지역별 인구, 1987~2008 (단위: 천)

	1987	1993	2000	2008
평양직할시	2,355	2,742	3,084	3,255
개성시	331	335	363	308
남포시	715	731	792	367
평안남도	2,653	2,867	3,051	3,685
평안북도	2,408	2,437	2,437	2,729
자강도	1,156	1,152	1,239	1,300
함경남도	2,547	2,732	2,930	3,066
함경북도	2,003	2,061	2,221	2,327
양강도	628	638	687	719
황해남도	1,914	2,011	2,224	2,310
황해북도	1,409	1,512	1,665	1,805
강원도	1,227	1,305	1,406	1,478
민간 합계	19,346	20,523	22,100	23,350
미분류	-	691	863	702
총인구	-	21,214	22,963	24,052

Source: KDI Collection of DPRK Statistics

4

2. GDP와 성장률



<표> GDP, 1990 ~ 2012 (단위: 억 달러, 달러)

	공식 발표		한국은행		UN	
	GDP	1인당	GDP	1인당	GDP	1인당
1990			232	1,146	147	735
1992	209	990	211	1,013	125	593
1994	154	722	212	992	83	384
1995	128	587	223	1,034	48	222
1996	106	482	214	989	106	479
1997		464	177	811	103	462
1998		458	126	573	103	456
1999	103	454	158	714	103	452
2000	106	464	168	757	106	462
2001		478	157	706	110	476
2002		490	170	762	109	468
2003		524	184	818	111	471
2004	112	546	208	914	112	473
2005			242	1,056	130	548
2006			256	1,108	138	576
2007			267	1,152	144	598
2008			248	1,065	133	552
2009			224	932	120	496
2010			260	1,074	121	498
2011			293	1,204	124	506
2012			297	1,217		

Source: KDI Collection of DPRK Statistics

5

2. GDP와 성장률



<표> 성장률 (단위: %)

	2000	2001	2002	2003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식 발표	3.9	3.2	7.1	4	...	-	-	-	-	-	-	-
한국은행	1.3	3.7	1.2	1.8		-1.2	3.1	-0.9	-0.5	0.8	1.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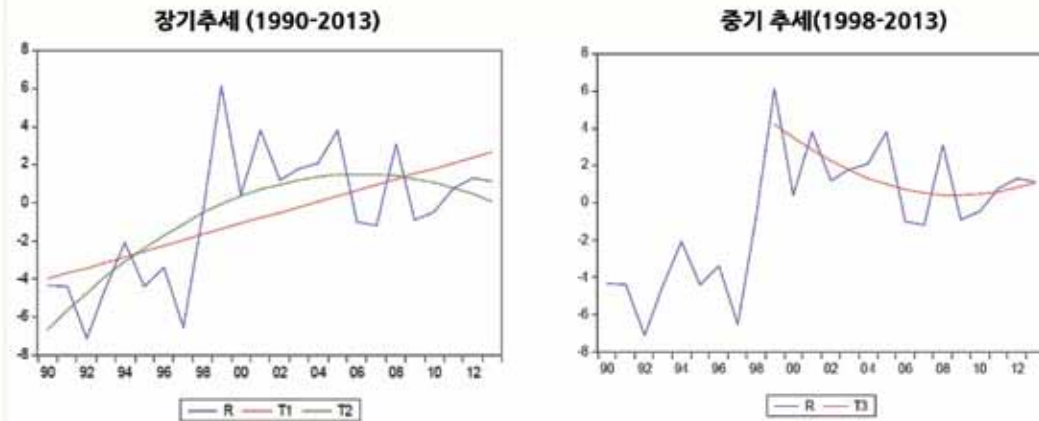
Source: KDI Collection of DPRK Statistics

6

2. GDP와 성장률



<그림> 북한의 경제성장률 및 추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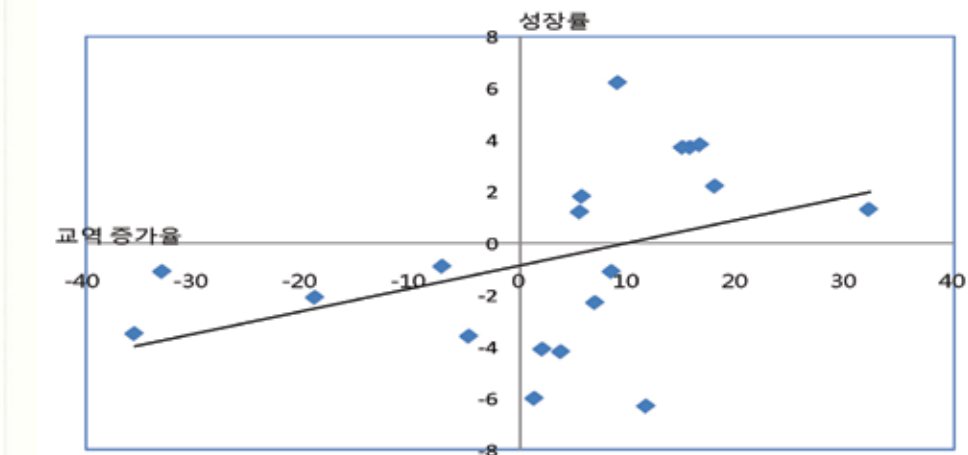


7

2. GDP와 성장률



[그림] 성장과 교역, 1991 ~ 2008 (단위: %)



8

3. 무역



<표> 수출 & 수입, 2000 ~ 2010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	2005	2006	2007	...	2012	2013	
수출		556	650	735		998	947	919		2,880	3,218
	중국	37	167	271		499	468	582		2,485	2,914
	대한민국	152	176	272		340	520	765		890	615
	일본	257	225	234		131	78	0		0	0
수입		1,413	1,620	1,525		2,003	2,049	2,022		3,931	4,126
	중국	451	571	467	...	1,081	1,232	1,392	...	3,528	3,633
	대한민국	273	227	370		716	830	1,033		1,070	512
	일본	207	249	135		63	44	9		0	0
합계		1,970	2,270	2,260		3,002	2,996	2,941		6,811	7,345
	중국	488	737	738		1,580	1,700	1,974		6,013	6,547
	대한민국	425	403	642		1,056	1,350	1,798		1,970	1,136
	일본	464	475	370		194	123	9		0	0

Source: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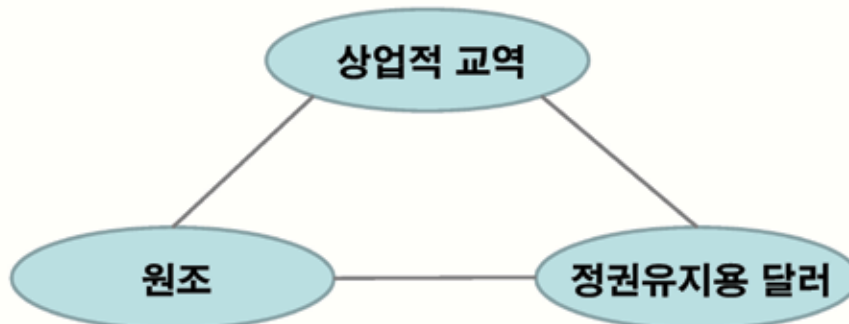
3. 무역



<5.24 조치 이전 북한 지지 교역구조>

-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북한경제 및 북한정부의 유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교역 구조

[그림] 북한지지 교역구조의 세가지 축



3. 무역



■ 상업적 교역

- 남북교역: 무역흑자
- 북중무역: 무역적자

■ 원조

- 한국으로부터: 식량과 비료
-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석유)

■ 정권유지용 달러

- 한국으로부터: 달러 확보
- 중국으로부터: 금융기관 및 제도 이용

11

3. 무역



<5.24 조치 이후 북중교역에의 의존과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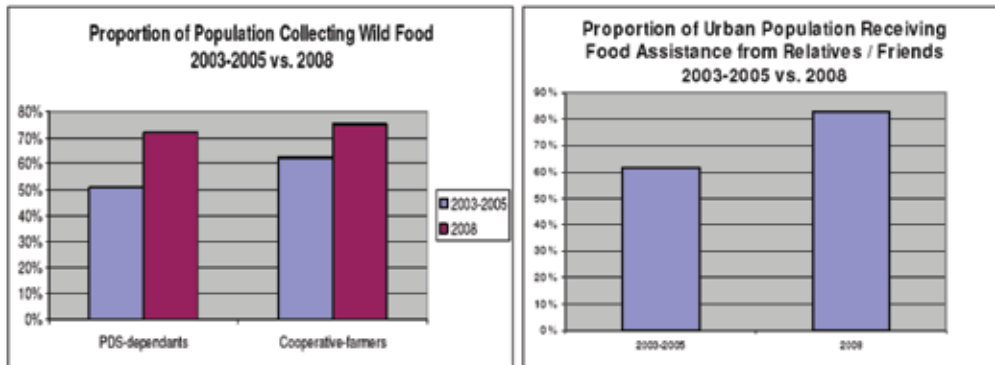
- 2010년 5월 24일 대북경제제재로 인한 “북한 지지 교역구조”의 붕괴
- 현재는 중국이 유일한 주요 무역 상대국
- 남북교역과 북중무역 간의 대체성 미미
- 자원(철광석 및 무연탄)과 노동의 대중국 수출 증가 - 국내경제의 부정적 여파 및 수출가격의 하락 등 고통

12

4. 경제 양극화



[그림] WFP 서베이, 2008



13

5. 경제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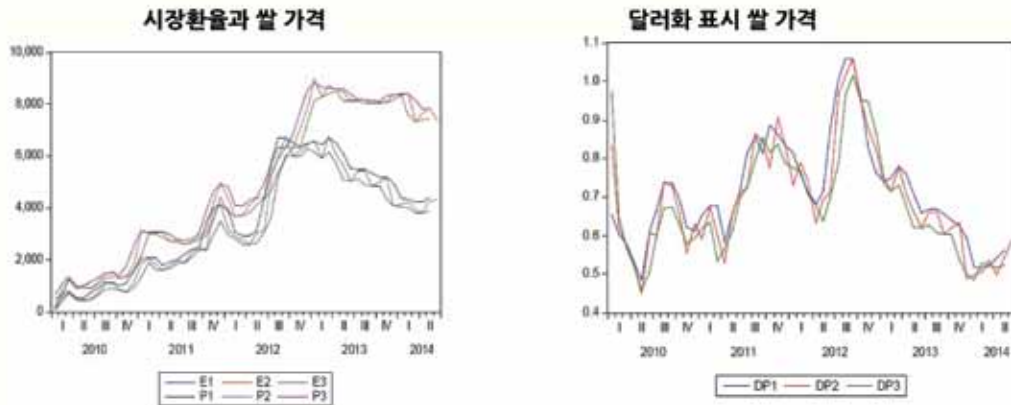
- 평양 vs. 비평양
- 공식 부문(계획) vs. 비공식 부문(시장)
- 대내부문 vs. 해외부문
- 가진 자 vs. 갖지 못한 자 (달러)

14

6. 시장 1 - 환율 & 가격



<그림> 시장 환율, 쌀 가격, 달러화 표시 쌀 가격 추이



$$\text{북한 가격} = \text{중국(대내)가격} \times \text{환율} \times \text{거래비용(이윤을 포함)}$$

15

7. 시장 2 - 규모



가. 가구경제활동 (이석, 2012)

<표> 가구경제활동에 참여하는 16세 이상 북한 인구, 2008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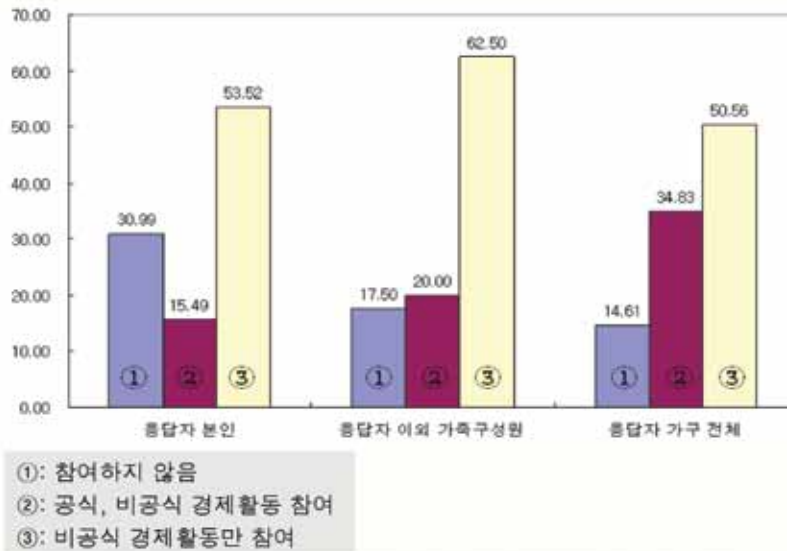
		인구 (A)	가구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B)	(B) / (A)
합 계	남성	8,001,786	6,285,430	78.55
	여성	9,364,983	8,193,138	87.49
	합계	17,366,769	14,478,568	83.37
도 시	남성	4,939,085	3,725,953	75.44
	여성	5,747,438	4,791,884	83.37
	합계	10,686,523	8,517,837	79.71
지 방	남성	3,062,701	2,559,477	83.57
	여성	3,617,545	3,401,254	94.02
	합계	6,680,246	5,960,731	89.23

16

7. 시장 2 - 규모



나.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 - 탈북자 조사 (이석,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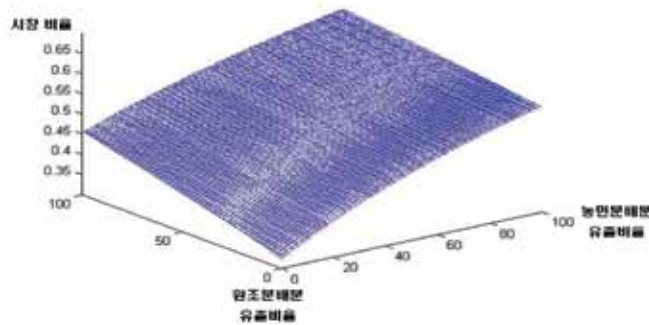
17

7. 시장 2 - 규모



다. 북한 식량 통계를 이용한 시장 규모 시뮬레이션 (이석, 2009)

1차 분배	2차 분배 (시장에서의 PDS 배급량의 재분배)				
	0%	33%	47%	100%	
PDS (공공배급소)	80.61%	80.61%	69.42%	65.55%	54.15%
시장	19.39%	19.39%	30.58%	34.44%	45.85%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8

8. 북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 낮은 1인당 소득 수준의 작은 나라
- 1990년대의 경제 위기로부터 조금이나마 회복하였지만 여전히 불황
- 중국, 대한민국과의 무역은 증가하였지만 다른 국가와는 제자리 상태
-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공식부문(계획)과 성장하는 시장이 공존하는 혼합 경제

19

II. 정책 - 관찰에 기초한 재구성

20

1. 배경



- 달러 부족 vs. 김정은 신정권의 점증하는 달러 수요
- 그러나 북중무역 등 대외교역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
- 특히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과 이들에 의한 기존 경제영역 재배분
- **결과:** 북한 내부의 달러를 흡수하고, 이를 새로운 정치권력에 집중시킬 경제적 메카니즘을 형성

21

2. 정책 1 – 시장과 지대



시장에 기초한 국가의 경제적 지대 (Economic Rent) 창출과 향유

- **평양:** 소비 붐 - 국가에 의한 경제적 지대의 수취 (ex. mobile phone)
 - * the more expensive/luxurious/exotic, the better
- **평양과 기타:** 건설 붐 - 시장분양 - 국가의 경제적 지대 수취
 - * Money can buy everything
- **전국:** 시장과 부패 - 국가와 국가 관료의 경제적 지대 수취
 - * Market says that power is money

22

3. 정책 2 - 대외거래와 투자



달러 획득을 위한 모든 대외거래 및 투자의 극대화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

- Natural Resources for Sale (전략적 자원의 수출)
- DPRK People for Sale (노동력 수출, 관광)
- DPRK Sovereignty(?) for Sale (Real or Fake - 투자와 관련된 주권 & 정치적 양보)

23

4. 정책 3 - 실질적 조세의 징수



경제적 수단과 경제외적 강제를 모두 동원한 국가의 조세수입 채널 확보

- 모든 국가 기구의 사실상의 조세 기구화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
- 작동하지 않는 국영기업의 조세기구로의 재편 (이른바 6.28 방침? 돈주에 의한 기업 운영)
- 협동농장을 통한 실질적 조세의 확보
- 지역 행정기구를 통한 실질적 조세의 확보

24

5. 정책 4 - 경제적 권한의 재분배



새로운 달러는 새로운 권력 엘리트에게

- 군부의 경제영역 약화 또는 재편
- 상기 경제영역의 신권력 주체들에 대한 배분 (내각으로의 배분?)
- 이를 위한 내부 권력 투쟁 (Inner Circle의 권력 재분배)

25

6. 정책의 경제적 귀결 - 개혁과 개방



가. 개혁 (필수)

- 평양은 달러가 있는 곳 - 번성하라!
- 시장은 권력을 달러로 바꾸게 하는 곳 - 이용하라! (개혁)
- 달러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시장을 이용하고 착취한다.

나. 개방 (필수)

- 달러는 외국에 있다 - 모든지 팔아라!
- 외국에 팔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외국의 말을 들어라
- 달러가 없는 곳 - 국내이든 국외이든 관심 없다

다. 체제로 편입되는 비공식 경제 (or 비공식 경제에 기초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

- 현재의 북한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비공식 경제
- 그러면 과연 북한은 어떤 사회주의 경제일까?

26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Presentation



남 성 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학 력

미주리 주립대(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응용경제학 박사
고려대학교 경제개발 석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 경 력

2009 – 현재 KBS 북한문제 객원해설위원
2004 – 현재 남북경제연구원장
2012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2005 – 2013 농림부 서울시 경기도 남북관계 정책자문위원
2008 – 2011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2006 – 2007 한국북방학회 회장
2005 – 2007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장

| 저 서

『Contemporary Food Shortage of North Korea and Reform of Collective Farm』 (2006),
Hervert Utz Verlag, Munchen, Germany
『현대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 (2004), 한울아카데미
『사회주의와 북한농업』 (2002.9), 비봉출판사

국내기업의 대북진출 성과와 과제 : 사례와 정책을 중심으로

남 성 옥 (고려대 북한학과)

I. 30년 남북경협 어디로 가는가?

1972년 이후 4반세기 동안의 남북관계는 양측의 의제가 우연히 일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간헐적이거나 제한된 진전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양측 모두가 이익을 얻는 ‘윈-윈(win-win)’ 게임을 했다고 보기는 정통성을 둘러싼 제로섬(zero-sum) 경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¹⁾ 경제분야의 남북관계도 이러한 정치적 특수성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경제분야의 대북진출과 접촉은 기업인들이 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거대 담론과 새로운 시장개척이라는 경제논리 하에서 어렵게 진행되어 왔다. 1989년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북경협은 그간 남북 간의 다양한 이유로 8차례 이상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다. 지난 1996년 대우 김우중회장의 남포공단을 시초로 출발한 남북경협은 오늘날 개성공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 산적한 과제를 안기고 있다.

2010년 5월 24일 통일부장관 명의로 발표된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 소위 ‘5·24조치’가 발표된 지 이제 2년이 넘었다. ‘5·24조치’는 크게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중 남북경협에 해당되는 조항은 “2항 남북교역 중단,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 3항 방북 불허, 북한 주민 접촉 제한. 4항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개성공단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 불허. 생산 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 축소·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1 > 남북교역 및 경협의 연역

1) Scott Snyder, 『Negotiating on the Edge: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Washington: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9), pp.143~144.

시기	정부의 정책과 남북관계
88.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발표
88.11.14	최초 반입 승인 (대우 도자기 519점)
'90.8.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기금법」 시행
90.9.25	최초 협력사업자 승인(대우), 최초 협력사업 승인(대우, 95.5)
02.9.18	경의선·동해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06.6.6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07.10.4	남북정상회담 10.4 선언 발표
06.10.9	북한, 제1차 핵실험 (10.14 UN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
09.5.25	북한, 제2차 핵실험 (6.13 UN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10.5.24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5.24 조치' 발표
13.4.8	개성공단 폐쇄 및 재개, 166일 만에 재가동(9.16)

5·24조치 발효 2년이 지나가면서 해당 조치의 실효성과 존치 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분명한 것은 5·24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은 존망의 기로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다. 2014년 9월 말 현재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은 중단상태이다. 금강산관광은 중단된 지 4년이 지났고, 내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 경협사업자들은 사실상 폐업을 하였다. 5·24 조치는 향후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추진의 신호등이 될 것이다. 다만 본고는 5·24조치의 해제에 대한 담론은 생략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해제여부에 대한 토론은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치판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지난 25년간의 의미있는 주요 경협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는 주로 사례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II. 대기업의 대북진출 성과와 과제

1. 대우 김우중 회장의 남포공단

1992년 1월 김우중 회장은 계열사 사장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여 당시

주석 김일성과 회담을 가졌다. 동남아와 아프리카·중동·중앙아시아에 질풍노도처럼 진출한 김 회장에게 북한은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시장'이었다. 김 회장과 김일성은 북한에 합작 공단을 조성해 일차적으로 섬유와 경공업 제품을 제조·수출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보다 8년 앞선 1996년 북한과 합작으로 평양 인근 남포에 경공업 공단을 세웠다. 그러나 남포공단은 3년 만에 문을 닫아 단명(短命)에 그치고 말았다. 당시 남포공단의 폐쇄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우그룹이 해체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IMF 사태만 아니었다면 대우가 남포공단을 계속했을 것이란 분석이었다. 그러나 최근 김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합작 공단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그 안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1998~1999년경 포기하였다고 언급하였다.²⁾ 막상 공단을 만들어 운영을 해보니 북한이 자기네 땅 안에서 자본주의 공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준비 자세와 마인드가 부족하더라는 것이었다.

김 회장은 그때까지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었다. 북한에서의 사업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입장이다. 공장 가동은 1996년부터 시작됐다. 대우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합작한 민족산업총회사가 그 주체였다. 대우는 여기에서 연간 셔츠·블라우스 310만벌, 제킷 60만벌, 골프 등 스포츠 가방 95만개를 생산, 유럽·일본 등에 연간 2000~3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회장은 봉제·섬유뿐 아니라 전자제품도 생산하는 등 남포공단을 대대적으로 키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남포공단은 김 회장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은 남포항에서 인천 또는 부산항을 거쳐 유럽·남미 등으로 수출했지만 공장 가동률은 50%에도 못 미쳤다. 공장 내 고장·사고가 끊이질 않은 데다 남포항 선적(船積)도 원활하지 않아 납기를 못 맞추는 일이 잦아졌고, 그 결과 해외 바이어의 주문이 급감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남북 경협 1호 사업인 남포공단은 3년 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³⁾

2) 조선일보 인터뷰, 2013년 5월 1일. 김우중 전 회장과 신장섭 국립싱가포르대 교수의 대담 집,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2014년 8월 27일.

3) 조선일보·TV 조선 김우중 회장 인터뷰, 2013.5.1.

북한측 합영 파트너인 조선삼천리총회사는 대우와의 합영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를 청산한 뒤 임가공으로 전환하겠다고 의사를 대우측에 표시해왔다. 북한측은 사업파트너인 대우의 의사와 합영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이었다. 북한측은 합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이유로 남포공단의 적자누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대우로부터 신규투자 등을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다고 분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99년 1월말 북한에 체류하던 대우 기술진 10명을 내보낸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우의 경영참여는 사실상 봉쇄되었다. 남포공단의 경우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스위스 투자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토록 돼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스위스 법규에 호소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계약 위반사실상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과 민간기업의 대북사업 기반이 허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북한이 최초로 남북경협에 응하기는 했지만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분석된다. 또한 대우측의 투자에 청사진이 북측으로 하여금 지나친 기대를 갖게 된 것은 남북한 문화와 기업방식의 차이 등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북측은 대우가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김 회장을 비난하는 등 양측은 상호 책임 전가에 주력하였다.

< 표 2 > 남포공단 사업개요

공 장	생산 규모	사업 규모(천달러)	대우 투자(천달러)
셔츠·블라우스	600만벌	9,900	2,827
제 킷	100만벌	9,300	1,155
가 방	100만개	3,600	1,140
계		22,800	5,122

출처: 대우측 발표 남포공단 사업현황(1999)

실패로 돌아간 남포공단 대북 사업



2. 현대 정주영회장,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1915-2001)은 1989년 1월 방북하여 금강산 관광 및 시베리아 공동개발 의정서와 금강산관광개발의정서를 체결하였다. 1998년 6월에는 소 500마리를 들고 방북하여 금강산관광을 위한 기본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1999년에 ㈜현대아산이 설립되어 대북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권과 금강산관광 개발을 총괄하였다. 현대는 1998년 11월 18일 '현대금강호'가 첫 출항을 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였다. 숙박시설이 늘어나면서 2003년 9월에 동해선도로 남북출입소를 통한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시되었고, 해로관광은 2004년 1월 중단되었다. 2005년 6월 금강산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08년 3월 17일부터 승용차관광이 가능해졌다. 2007년에 누적 관광객 200만 명을 돌파했으나 2008년 7월 11일 남한 관광객이 아침 산책 중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잠정 중단된 상태다.

대우가 남포공단을 포기하자 2000년 현대는 북한과 개성공단을 만들기로 전격 합의했다. 현대는 개성공단 설립 합의에 앞서 1998년부터 공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2000년 8월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었다. 현대는 1998년 시작한 금강산관광에서 수익을 내지 못해 공단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2000년

11월 당시 한국토지공사(토공)와 '1단계 개발 공동사업 시행 협약'을 맺어 정부의 지원을 끌어냈다.

2001년 3월 21일 정주영 회장이 별세하자 개성공단 조성 사업의 주도권은 사실상 정부로 넘어갔다. 현대와 토지공사는 2004년 4월 공단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한 뒤 시범단지(9만3000㎡)에 대한 분양을 시작했다. 시범단지에는 봉제, 신발, 전자부품 등 4개 업종 15개 기업이 입주해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이 생산됐다. 개성공단 개발 사업은 본격적인 남북 산업간 협력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말 시범단지에서 본격적인 공장가동 이후 1단계 개발을 진행하였다. 2014년 6월 현재 섬유 72개, 기계금속 23개, 전기전자 13개, 화학 9개 등 모두 7개 업종 125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1단계 개발이 완료된 개성공단은 주로 남측의 제조업 설비 및 기술과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된 형태로 협력이 진행되어 노동자 교육을 통한 일련의 제조 기술 이전 효과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남측 경제는 북측에서 제공한 저렴한 토지 임대료와 임금의 장점으로 질 좋은 제품을 생산, 수출하며 북측은 공단 운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군사분계선 이남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아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⁴⁾ 개성공단 업체들과 남측 기업들 사이의 연계가 깊다보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생산 활동이 한국 경제의 전체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 즉 생산유발효과는 47억 4368만 달러에 달하고, 부가가치는 같은 기간 동안 13억 7817만 달러에 이르렀다. 취업에 대한 파급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북측 근로자가 1만 명 늘어날 때 개성공단과 연계를 맺고 있는 남측 기업의 고용도 5천 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이 이미 한국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된 것이다. 개성공단이 본래 제도대로 2, 3단계로 향해 확대 개발된다면, 중소기업의 남북 협력을 통해 수출 제별 중심의 산업 구조가 갖는 취약점을 대폭 손질할 수 있게 된다.

4) 2012년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측 협력업체가 약 6,000여 개에 달하고 이들 사이의 거래규모만 연평균 48억 달러였다고 한다.

MB 정부 당시인 2008년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발생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돼 대부분의 남북 경협 사업이 중단됐지만 개성공단 사업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됐다. 2013년 4월 들어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위협 발언에 이어 4월 8일 개성공단 출입 제한조치를 감행하였으나 166일 만에 정상화되었다. 현재 개성공단은 국내 125개 업체가 53,000여명의 북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3. 삼성의 대북사업 관망과 신중으로 유보

북한은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대북 투자에 신중한 입장인 삼성그룹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북측은 삼성그룹의 자금능력을 고려할 때 대북 투자를 ‘퐁이 크게’ 벌일 수 있는 기업으로 분석하고 있었다.⁵⁾ 또한 삼성이 전자부문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기술이전을 원하고 있었다. 북측은 대북 투자에 지극히 보수적인 삼성이 대규모 북한투자에 나설 경우 외국 자본 유지가 훨씬 용이해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삼성은 북경지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제작 등 소규모 외주를 진행하면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나 투자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투자를 유보하였다. 삼성은 투자액의 손실보다는 기업의 신인도 하락에 따른 외국인 주주의 반발 및 전체 기업의 주가하락 등을 우려하였다.

LG 상사 등이 수산물 양식 및 가공 사업을 소규모로 진행한 바 있다. SK 그룹도 대북사업에 관심을 가졌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세계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면서 대기업은 수익성 확보가 담보되지 않는 대북 사업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4. 북한의 국내 대기업 유치 전략

대기업의 투자는 민간 중소기업이나 공기업의 투자와 달리 재벌총수의 결

5) 투자조건에 관해 삼성측과 북한측은 이견을 보였다고 한다. 삼성측은 10년간 5억불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나 북한측은 5년간 10억불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학수 당시 삼성구조본부장은 2000년 5월3일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북한에 50만평 규모의 전자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투자계획이 합의되면 이견 회 회장이 방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정만으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측으로서는 관심이 적지 않았다. 특히 북한의 외화벌이 담당기관간에 외자유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기업 투자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그간 남북경협에서 3가지 유형의 기업을 선호하였다고 분석된다.

첫째, 일방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는 기업, 둘째, 북한 체제유지에 영향이 적은 기업, 셋째, 선진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⁶⁾ 이러한 측면에서 5대 재벌기업의 첨단기술과 자본은 북측의 집요한 구애를 받았었다. 마지막으로 북측은 SOC 분야에서 남측 재벌기업 이외에 공기업의 참여를 요청하였었다. 북측은 단기적인 수익창출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SOC 투자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의 각종 기금이나 예산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남측 공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증설이 필요한데 이는 남측의 한전이 맡아야 하고 도로 및 항만건설은 도로공사 사업 발주하며 철도연결은 코레일이 해야 한다는 전략이었다. 물론 실제 공사는 민간기업이 맡는다. 현대아산은 경의선 노선 중 미연결 구간인 문산~봉동간 25km를 복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⁷⁾ 북한은 이러한 대북투자를 실행하기 위해 남측 기업간 경쟁을 유도하였었다. 특히 북한과 우리민간 기업간의 계약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종 투자 선행비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III. 중소기업 대북진출 성과와 과제

지난 20년간 중소기업의 다양한 대북진출 시도가 있었으나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금력이 미흡하고 국내에서 사양화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SOC가 미흡한 북한에 진출해서 단기간에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용이하지 않았다. 주로 가방, 봉제 및 의류 등 노동력을 활용하

6) 2000년 4월27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세미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주제 발표 자료, "남북경협 그간 무엇이 문제였나- 엘칸토(주)의 대북경협 사례?" (주)엘칸토 정주권 이사.

7) 경의선은 서울~문산~평양~신의주 노선으로 현재 문산~봉동구간이 남북분단으로 끊겨 있다. 이 구간을 재건하고 복선화한 뒤 현대측이 서해안 공단부지로 검토중인 해주를 지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현대는 일정기간 사용료를 받은 뒤 운영권을 북한측에 넘기는 '시공-운영-양도'의 사업방식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2000년 4월 17일자.

는 단순 임가공 사업은 과도한 물류비용, 북측 현지접근에 어려움 및 북측의 비시장적인 경직적인 태도 등이 맞물려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특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과 핵문제 등 정치적 충돌상황은 사업 중단을 유도하였다.

공기업의 대북진출은 한국석유공사의 북한 서해유전 개발 사업, 한국광물공사의 북한 정춘지구 흑연광산 개발과 회토류 개발 사업, 포스코의 북한 무산철광과 단천지구 광산 투자 타진 등이 실제로 추진되거나 타당성이 검토된 바 있다. 민간중소기업으로는 엘칸토(주)와 녹십자(주) 및 안동대마방직(회장 김정태)의 평양진출을 들 수 있다. 본고는 안동대마방직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이외 지역 진출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하고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은 2005년 국내 기업 최초로 육로를 통한 경험물자 운송을 실현시켰다. 김 회장은 분단 60년 만에 민간경제인 최초로 2005년 10월 평양시내 한가운데 평양대마방직합영회사를 설립, 4만㎡ 규모의 종합섬유가공공장을 건설하기로 북측과 합의하였다. 1단계 공장은 합영회사설립계약에 근거하여 남측 안동대마방직과 북측 새별총회사가 각 500만 달러를 출자해 건립했다. 남북합영기업 1호인 '평양대마방직'은 지난 2008년 10월 거금 1,500만 달러(170억원)를 투자해 전체 공장을 건설했다. 김 회장은 임가공 위주의 산업구조로는 북한경제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섬유부분 제조업에서 만큼은 상품의 가득률(가공무역을 통한 외화획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계획이었다며 향후 남측기업이 대북투자를 진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었다고 한다.⁸⁾

8) 2013년 4월 23일 김정태 회장, 일요신문 인터뷰 “공장 준공 때까지 내가 평양을 95번 다녀왔다. 이 사업을 위해 국내 기술자 등 한국 인원 1046명이 평양을 출입했다. 본격적인 사업 이전에 이러한 준비 과정에 든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사업 초기였던 2005년, 시험삼아 500만 달러를 투자해 생산에 나서봤다. 원단을 가져와 북한의 제래식 생산시설로 상품을 만들어 봤는데, 질이 너무 떨어졌다.

결국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에 필요한 설비 16개 라인을 북에 올려 보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명색이 수도인 평양에도 산업 인프라가 전혀 없었다.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더라. 부품 하나 구하려면 2주가 걸렸다. 초창기 전압이 불안해서 생산라인이 일부 베고 다 고장 나더라. 또 북한은 출입 자체가 힘들지 않나. 인프라는 부족해도 그나마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보다 못했다. 제조업 환경 자체로 보면 평양은 최악의 조건이었다.”

안동대마방직은 북한 강원도와 황해도 일대에 900만평 규모의 대마농장을 운영, 연간 6만 톤 정도의 대마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마제배·대마섬유·대마원단·원제품에 이르는 전 공정을 북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이 외에도 평양지역에 진출한 120여 개 남한 제조업체의 원활한 원자재공급을 위해 개성에서 새별총회사와 북한 내륙 물류운송사업을 위한 조인식을 가지는 등 영역 확대를 시도하였다.

물류사업을 위해 8.5톤 트럭 20대, 11.5톤 트럭 20대 등 40대가 북한으로 이동하였다. 안동대마방직은 우선 평양에 진출한 20여개 기업과 북한 내륙운송을 담당하기로 구두계약을 맺었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 300만 달러의 물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첫 생산을 시작하려던 2009년 3월,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냉각됐고 2011년 5월 MB 정부의 5.24 조치로 북한 출입이 막혔다. 또한 공장 운영은 정상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예상외의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였다. 자금난과 남북 출입이 통제되면서 사업은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다.

<표 3>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89-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반입	2,006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1,044	615
반출	1,505	435	439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521	521
계	3,571	724	697	1,056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971	1,136

* 전체 반입 9,572, 반출 9,676, 계 19,428

IV. 북측의 전략은 무엇이고 우리의 향후 정책과제와 방향은 무엇인가?

1. 북한의 기업유치 전략 : 경제특구의 계속적 발표

북한측은 그간 남측으로부터 적지 않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라는 용어를 싫어한다. 주체사상을 내세워 대외적으로 남측과 경제협력

은 하지만 지원은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대내외에 강조한다. 또한 남북한간 경제협력은 여유 있는 남측기업이 동포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일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기업의 대북진출에서도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단지 남측이 사업을 위해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용어상의 모순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북측은 실제로 남한측에 원조내지 지원 성격의 경제협력을 요구하였고 향후에도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한국전쟁이 종료한 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각종 원조에 해당하는 지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단순지원은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을 절약하는 투자에 해당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단순지원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경제문제는 단순지원과 투자사업 등으로 이원화될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이후 13개의 지방경제특구 등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남북경협이 담보상태에 이르자 특구를 통한 외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에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중국기업들의 참여는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접적으로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북한측은 5·24 조치가 해제되고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단순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남측의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각종 비료 등 각종 농자재 및 식량과 컴퓨터 등의 무상내지 염가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반면에 금강산 관광과 같이 현금수입이 있으면서 북한체제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투자사업을 요청할 것이다. 또한 남한측 대기업의 참여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토록 요청할 것이다. 이미 투자를 한바 있는 현대를 제외한 삼성 등 여타 대기업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 또한 한전, 석유개발공사 및 포철 등 한국측 공기업이 북한측에 우리측 시설과 유사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희망할 것이다.

한편 북한측이 내부적으로 대남 경협을 희망했던 분야가 과거 북한에 의해 발표⁹⁾되어 그들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이 남측대표들에게

9) 평양방송은 김일성 주석의 연설을 정리한 노작 '은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를 2000년 4월8일~10일간 세 차례로 나눠 내보내면서 김주석이 지난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채택 이후 평양에 온 남측 대표들에게 제의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2000년 4월 17일자.

제의한 사업은 1)농업 관개공사, 2)수산업, 3)광산개발 등 세 가지 분야다. 김주석은 “우리에게 관개경험을 한 경험이 많은 만큼 우리가 기술과 자재를 대고 당신들은 노력(노동력)을 내어 남조선에서 관개공사를 하자고 했다. 또한 물고기 잡이에서도 합작하자. 신포 앞바다는 물고기가 많다. 광산도 공동으로 개발하자. 이하 중략” 라고 남측대표들에게 발언하였다. 시대가 변하고 경제여건이 달라져 그대로 실행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개발이나 신포어장¹⁰⁾ 등은 북한이 관심을 보이는 사업이다.

2. 단순 원조성 지원사업

단순 원조성 지원사업의 첫 번째 목록은 북한의 ‘먹는 문제’ 해결이다.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년 농사 단위에 맞추는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단순히 부족한 식량을 현물로 보충해주고 비료·농약·종자 등 각종 영농자재를 공급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농업에서 이미 진행중인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하여 농지를 대규모로 확장하는 한편 각 지역에 맞는 우량종자를 개발하고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등 3~10년을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 등이 해당한다.

비료 등 농자재 공급을 매년 정례화 하는 등 장기적인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식량난은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식량생산이 양호한 상태에 있었던 1960년대 후반에조차도 식량을 자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¹¹⁾ 산지가 80%로 이루어져 경작지는 전국토의 14%에 불과한 171만ha로서 인구 2,400만명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연간 최소 10~30만톤 정도의 식량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북한은 먹는 문제 다음으로 에너지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처

10) 동해 공동어업협력사업은 2000년 2월 26일 남측 전국어민총연합회(전어총)와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사이의 전격적으로 합의되었다. 전어총은 정부의 북측집속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강원도 어민들의 반대로 시행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11)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1967년 농민과의 접촉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금년에 최소한 100만톤의 식량을 증산해야 한다. 100만톤을 증산하면 수입하던 50만톤을 안 해도 되고 50만톤을 수출할 수 있다.” 1967년 당시 인구 1,100만에서 식량을 50만톤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 있다. 북한의 에너지난은 현재 북한경제가 회복하는데 발목을 잡는 심각한 장애물이다. 북한은 현재 발전량 부족과 송배전망 취약 및 급전(給電)운용 기술 낙후 등으로 정전이 빈번하고 전기품질이 불량하여 정밀기기 사용이 곤란한 실정이다.¹²⁾ 특히 우리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여 공장을 세우더라도 에너지가 부족하여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다는 측면에서 북측의 관심분야다.

3. 투자성 대북경협사업

북한은 향후 5.24조치의 해제이후 관계 정상화 단계에서 단순 원조성 지원 이외에 남측기업이 각종 대북투자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토록 요청할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과 공기업으로 참여주체가 이원화 될 것이다. 우선 북측은 가급적 협상이 용이한 재벌급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요청할 것이다. 현대와의 경협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만큼 여타 대기업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 북측은 현대와의 협상 경험을 최대한 살려 ‘퉁이 크게’ 투자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재벌총수의 방북을 허용할 것이다. 특히 현대이외에 삼성을 비롯한 5대 재벌기업의 투자를 희망하고 정부차원의 장려 대책을 요청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대북진출의 단서는 5.24 조치의 해제와 핵문제의 해결이 될 것이다.

III. 우리는 향후 어디로 가야하는 가?

1. 수익성 확보 분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우리기업의 대북진출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남북간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개선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남북경협은 정치분야의 의제와 달리 양측이 경협 자금을 조달하고 각종 사업의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것이 1~2년에 마무리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의제와 장기적인 과제로 구분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과거 우리기업들이 대북 투자사업을 시장의적 요인에 따라 전격적으로 추

12) 송배전 손실률은 30%를 초과(남한은 5%), 계통 주파수는 50~55Hz 수준으로 기준주파수 60Hz에 미달하며 계통전압은 기준전압의 80% 정도까지 강하한다. 한국전력, “남북한 전력계통 연계 등 대북 전력분야 협력방안 보고”, 2000년 2월.

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시간개념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약속하여 추후에 북측으로부터 신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경험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시간개념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경험비용의 조달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만큼 너무 앞서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자금조달은 각국의 협력 및 북한의 개방 등 사전에 정지하여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적용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적 의제로는 1년 이내에 현재 가용한 예산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우리측으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제도개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간 물자 반·출입시 과도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시 공단입지에 대한 제한 완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1992년 9월 17일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는 사실상 남북간 경협을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경제분야 합의사항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현장에서 이행하는 정신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2.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의 기본서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표 4>에서 보듯이 경제협력을 하는데 기본적인 세부절차가 상당부분 반영된 만큼 별도의 협의보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절차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합의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지도 않다. 향후 남북 양측이 이보다 더 진전된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 망라되어 있다.

<표 4> 1992년 남북 교류협력부문 부속합의서 경제교류 분야 관련사항

항 목	주 요 내 용
추진원칙	-교류협력 당사자간의 직접 계약체결로 물자 교류 실시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도 가능 -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에서의 합영·합작투자
물자교류	-상호성과 유무상등의 원칙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협의, 결정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 가능
합작투자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 절차 등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 가능 -법규 및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교환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 보장
과학·기술 환경분야	-과학·기술, 환경분야의 정보자료 교환, 공동연구 및 조사,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의 교류 -환경보호 대책 강구
수송분야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사이의 해로개설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사이의 도로 연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 개설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 개설
통신분야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 보장
국제경제 협력	-경제분야의 국제행사, 국제기구에서 협력 -해외에 공동진출을 위한 협의 추진
이행 및 실천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가 담당

출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논의를 거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다. 그간 남북경협은 북한의 시장경제 원리의 불인정과 우리 정부의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민간 베이스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험에 참여한 기업들은 과실송금, 이중과세 문제 및 대금결제 방식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투자 리스크를 증가시켜 왔다. 향후 당국간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치하여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제거하여야 한다.

경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측간 상호이익에 근거한 효율성이 중요하다. 일방적인 지원만이 반드시 북측의 경제회복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투입-산출의 경제논리를 전수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정치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경제협력을 위한 여건의 변화과정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¹³⁾ 남북경협은 당장의 이익보다 경제통합을 촉진해 남북 모두에 경제적 편익을 가져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과의 경험에서 벤처기업식으로 일시에 수익을 올리려는 인식은 너무도 현실을 모르는 소치이며 일시에 경험을 통해 남북관계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발상도 순진한 측면이 다분하다.

3. 통일지향적 경험과 체제수호적 경험, 접점은 없는가?

남북한 경험은 경제협력의 높은 보완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는 경험의 본질적인 개념의 차이가 있다. 남측의 경험은 경제적인 논리에 기초하여 북한의 경제에 자생력을 갖게 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통한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반면에 북측은 경험을 정치논리에 치우친 대남전략의 수단으로 북한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즉 남측은 '통일지향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북측은 '체제수호적인 경험'을 선호하게 된다.¹⁴⁾ 이는 양측이 차선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노력이 없으면 성과가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남북협상은 늘 고통스러운 인내를 요구한다. 남북 당국간 대화가 개최될 때마다 북측은 대북지원에 대한 구체적 약속 이행을 요구할 것이고 남측은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새로운 여러 조치를 역설할 것이다. 양측이 상대방을 이해

13) 최신희·이석기,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서울: 산업연구원, 2000), 93~104쪽.

14) 양운철(편), 『남북한 경제협력』 (성남: 세종연구소, 1997), 31~34쪽.

하려는 노력만이 작은 성과나마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 대북협상 과정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긍정적 측면은 협상과정이 매우 힘들고 구불구불한 길이며 방해 및 우회해야 하는 장애물로 가득 차있을지라도 북한측과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정적 측면은 대북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을지라도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현실적이고 명백한 위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발생은 협상의 중요한 시점이 되기도 하고 실패·불안정으로 향하는 소용돌이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¹⁵⁾

4. 중국과 대만은 우리의 벤치마킹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한 중국과 대만의 경험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중국과 대만의 교역량은 우리와 중국의 교역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양안관계가 악화되어 대만이 자국민의 대중국투자를 억제했을 때 중국은 역으로 '대만 동포 투자에 관한 특별우대법(1983년)', '대만 동포 투자장려규정(1988년)' 등을 제정하여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했었다. 이는 남북한 경험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사실상의 통일단계로 진입했다는 판단이다.

15) Scott Snyder(1999), pp. 153~154.

참고문헌

- 장승호 옮김, 『경제탐험』 (서울: 이진출판사, 1999). Lester C. Thurow, 『The age of Economic exploration; What lies beyond Capitalism』 .
- 김영운,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남성욱, “북한의 경제회복과 성장전망에 관한 소고”,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연구과정 편, 『북한연구』, 제2호(1999).
- , “북한식량난과 인구변화 추이” 『현대북한연구』 제2권 제1호(서울: 경남대학교, 1999).
- 동용승·서양원, 『남북경협 이렇게 풀자』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5).
- 박유환, 『북한의 금융제도와 남북한 금융협력방안』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1997).
- 양운철(편), 『남북한 경제협력』 (성남: 세종연구소, 1997).
- 유석향·임종관, 『남북한 화물운송체제 구축방안』 (서울: 해운산업연구원, 1993).
- 신용식·안성조,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서울: 한국무역협회, 1998).
- 장영수·이창재·박영근,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 정주권,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주제발표 자료, “남북경협 그간 무엇이 문제였나- 엘칸토(주)의 대북경협 사례 ?” .
- 최신립·이석기,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서울: 산업연구원, 2000).
- 통일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실태 ('98년 기준), 2000년 3월 24일. www.unikorea.go.kr
- 한국전력, “남북한 전력계통 연계 등 대북 전력분야 협력방안 보고”, 2000년 2월.
- 해운산업연구원, 『통일에 대비한 해운항만정책 구상』 (서울: 해운산업연구원, 1995).
- LG경제연구원, “정상회담이후 북한특수의 5대 조건”, www.lgeri.com. 『연합뉴스』, 2000년 4월 17일자.
- 『조선일보』, 2000년 4월 12일자
- 『중앙일보』, 2000년 4월 19일자
- 『중앙일보』, 2000년 4월 17일자.

- 『한국경제신문』, 2000년 4월 4일자.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2000년 4월 13일 기자회견 내용.
- 小此木政夫편, “북조선ハント”ブック”(東京: 講談社, 1997). 김성환 옮김, “북-일 경제관계 현황 및 전망,” 『북한뉴스레터』, 2000년 5월호(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7~17쪽.
- 田辺輝行, “베트남 경제개혁의 경험: 북한경제 부흥에의 시사점,” 『통일경제』 제56호, 1999년 8월호.
- FAO, North Korea Food Shortage Special Report 95~98, www.fao.org
-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Scott Snyder, 『Negotiating on the Edge: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Washington: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9).
- Quinones, C. Kenneth(미국 비영리단체 머시코 인터내셔널의 동북아 프로젝트 책임자) 인터뷰, 『연합뉴스』, 2000년 4월 11일자.

Presentation



이 재 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학 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 박사; 국제경제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석사; 국제경제전공)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졸업(경제학 부전공)

| 경 력

2012.07 – 현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0.01 – 2012.07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
2001.01 – 2009.12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
2006.08 – 2007.07 대통령직속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수석전문관
1996.12 – 1997.12 日本 總合研究開發機構(NIRA) 객원연구원
1993.12 – 1994.12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자문관실
1989.12 – 1993.06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주임연구원

| 주요 연구보고서 및 프로젝트 수행실적

중소기업지원사업 심층분석, 중소기업연구원, 2013
중소기업의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확대방안-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2013
UN대북경제제재의 효과분석: 결의안 1874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1
동북아 분업구조하에서의 북중경제협력, 한국개발연구원, 2010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한국개발연구원, 2010



제2 개성공단: 그간의 논의와 평가

중소기업연구원 이재호

K/SBI 중소기업연구원



Contents


- 1 제2 개성공단에 대한 그간의 논의
- 2 왜 제2 개성공단인가?
- 3 제2 개성공단 논의에 대한 평가

K/SBI 중소기업연구원

2

1. 제2 개성공단에 대한 그간의 논의

최근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의견이 제기

 민간·학계차원: 나진-선봉을 대상으로 제2 개성공단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대두

제2 개성공단 관련 민간·학계차원의 주요 논의



“나진·선봉지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국경을 맞댄 곳으로 동북아 물류의 요충지다. 이곳에 제2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014.07.24)




“신의주-목포-부산-나선 등 네 개의 꼭지점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 U자형 경제벨트 필요.’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 2014.07.24)

3

1. 제2 개성공단에 대한 그간의 논의

정부도 그간 제2 개성공단에 대한 가능성을 피력

 정부차원: 그간 가능성 언급. 다만 현정부의 기본 입장은 “검토 안함”

제2 개성공단 관련 정부차원의 주요 논의



“남포를 제2 개성공단으로 조성 가능”
(노무현 前 대통령, 2006년 정상회담 중)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취한다면 제2 개성공단을 만들 수도 있다”
(이명박 前 대통령, 러시아 방문시 2010.09.11)



“여건 되면 제2 개성공단 검토”
(류우익 前 통일부장관, 2011.09.14)

4

2. 왜 제2 개성공단인가?

개성공단 10년의 성과 : 가장 성공적으로 급성장한 공단

가장 합리적인 남북경협모델로 성장

초기 1천5백만 달러에서 지난 10년간
누적 생산액이 23억만 달러를 돌파

2005년 18개에 불과했던
입주기업은 2014년 현재
125개 업체로 증가



북측 근로자는 초기 6천명
수준에서 현재 약 5만
2천여명으로 증가

5

2. 왜 제2 개성공단인가?

개성공단 10년의 한계 : 정치제도적 불안정과 노동력 부족

한 계 점

정치·제도적 불안정

- ❖ 정치적 불안정: 2013년 4~9월, 남북관계 악화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
- ❖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제도적 불안정: 3통(통행, 통관, 통신)문제 해결 지연, 투자자산 보호문제, 노무관리 및 임금문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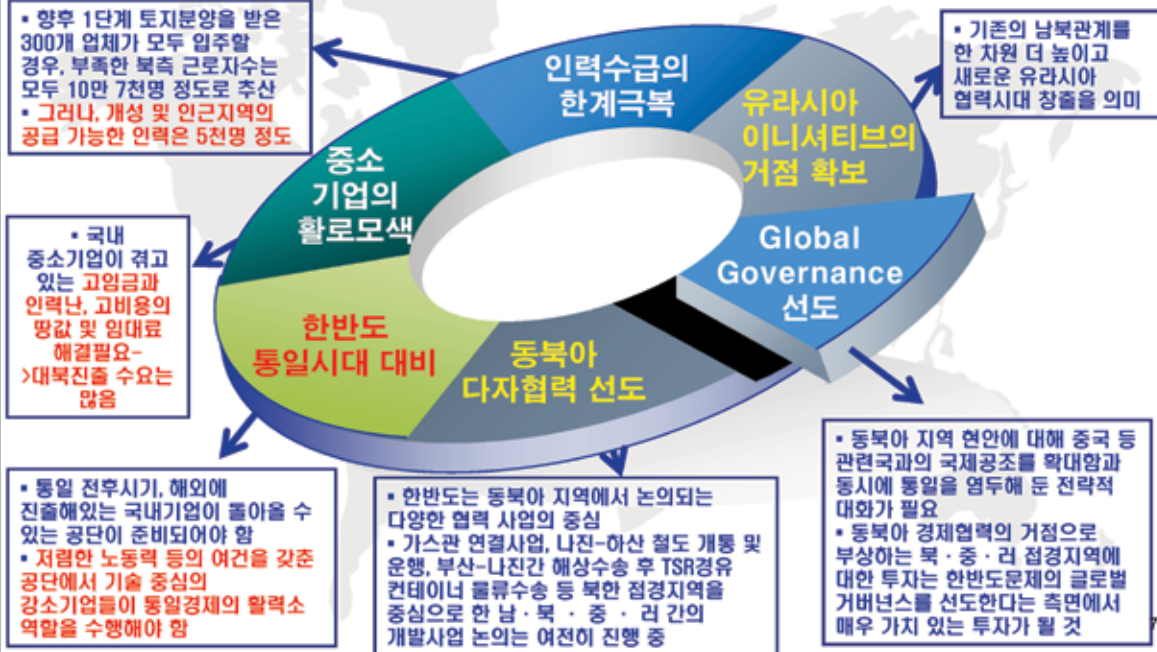
인력수급의 한계 도달

- ❖ 여러 정치·제도적 문제와는 달리, 실제 입주 기업이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 부족 문제
- ❖ 현시점에서도 최소 2만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6

2. 왜 제2 개성공단인가?

또 다른 공단조성의 필요성 대두



3. 제2 개성공단 논의에 대한 평가

북한 내 공단 조성은 여전히 매력적인가?

※ 개성공단은 국내 또는 제3국의 유사 공단과 비교할 때 인건비와 토지 사용료, 생산성, 세제, 물류비용 등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보유



3. 제2 개성공단 논의에 대한 평가

북한 내 공단 조성은 여전히 매력적인가?

이러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춘 북한 내 공단은 중소기업 활로의 토대

1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그 동안 전통·생활산업과 전기·전자 및 기계·금속 등의 생산조립부문 등에서 크게 기여해온 중소기업이 국내에서의 생산활동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한계상황에 봉착

2 한계상황의 극복을 위해 중국 등 해외에 진출했던 중소기업들이 최근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경영악화로 U턴을 실행·모색하는 기업이 증가할 정도로 그 형편이 악화

❖ 따라서 북한 내 공단이 갖는 월등한 경쟁력은 국내에서 한계상황에 놓여진 이들 중소기업과 U턴을 모색하는 중소기업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피난처이자 기회의 땅

9

3. 제2 개성공단 논의에 대한 평가

그렇다면 어디에 조성할 것인가?

남포, 해주, 신의주, 나진-선봉 등은 제2개성공단 후보지로 지속적 거론

	노동력		원재료	집적 효과	응지	시장	기반시설			종합 평점	순위
	질	양					교통	용수	전력		
평양.남포	5	5	3	5	4	5	5	4	4	40	1
개성.해주	4	3	2	3	4	5	5	4	5	35	2
신의주	4	3	3	3	3	5	4	4	4	33	3
안주.순천	3	3	4	3	4	4	3	4	3	31	5
함흥.원산	4	4	4	3	4	4	4	3	3	33	3
청진.김책	4	3	5	3	3	4	3	4	3	32	4
나진.선봉	3	2	4	2	3	3	2	3	3	25	6
강계.만포	2	2	4	3	2	2	2	4	3	24	7

❖ 자료: 이상준 외, 동북아 협력시대의 한반도 서해안권 종합발전 구상, 국토연구원, 2011; 이석기 외 (2013)에서 재인용

❖ 주: 항목별로 1점(최저)~5점(최고)을 부여한 다음 단순 합산한 것임

❖ 특구의 성공적 입지조건을 고려할 때 북한의 수도권 및 주변지역은 풍부한 노동력과 남한과의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 가능

10

3. 제2 개성공단 논의에 대한 평가

그렇다면 어디에 조성할 것인가?

제2 개성공단 관련 민간·학계차원의 주요 분석

	장 점	단 점	주 요 산 업
평양.남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반 ✓ 사회간접자본 및 노동력 ✓ 정부의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을 의식한 통제 ✓ 특히 평양지역은 인원과 물자의 이동에 엄격한 통제 	전기전자, 기계, 철강, 조선, 방직, 의류, 시멘트, 유리, 신발, 식료
나진.선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에 근접한 법규체제 ✓ 정부의 지원정책 ✓ 중국 동북부 및 일본과의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반의 낙후 ✓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 북한의 여타지역과의 단절 	정유, 물류
신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적 발달한 경공업 ✓ 대중국 국경무역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 남한과의 지리적 거리 	화섬, 제지, 방직, 신발, 기계, 조선
해주.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근접성 (서울과 평양의 중간지점) ✓ 중국과의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반 미비 ✓ 북한의 군사적 고려 	광업, 시멘트, 제련, 비료, 경공업

✦ 자료 : 김석진, 이석기, 양문수, 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전략 연구, 연구보고서 2011-617, 산업연구원, (2011) 및 최신림, 이석기, 남북한 경제협력방안, 산업연구원, (2000)의 주요 내용을 재편집

11

3. 제2 개성공단 논의에 대한 평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1

- (1) 잠재적 후보지역(남포, 해주, 신의주, 나진-선봉 등)에 대한 상세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될 필요
- (2) 이와 더불어 대북진출과 관련한 기업수요를 조사할 필요

2

- (1) 정부는 민간/학계의 타당성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그 추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개선할 필요
- (2) 이와 더불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



- ✦ 특히 중국 등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공단조성을 고려할 경우 남북중, 남북러 등 3각 협력모델을 통한 공동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동북아지역을 둘러싼 'Global Governance' 를 선도할 필요

12



아시아경제 □
통인
포럼
2014년

Session 3

통일한국을 위한 대북경협확대 방안

[Presentation]

정 형 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임 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익 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Presentation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 학 력

캘리포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독일 본(Bonn)대학교 경제학 학사

| 경 력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자문위원

현재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위원

현재 민주평화통일 상임위원

Johns Hopkins 대학교 국제대학원 (SAIS) 풀브라이트 방문학자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단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선임행정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정책자문위원

경제특구 컨설턴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식공유사업)

| 연구분야

북한경제, 한중일 무역 및 투자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

경제자유구역 등 투자환경 개선 관련 연구

일본 IDE-JETRO, 중국 DRC와 오랫동안 공동연구 진행

통일한국을 위한 대북경협 확대방안

2014년 9월 30일

정형곤 (KIEP, 부원장)

1

CONTENT

- I** 서론
- II** 북한경제의 실태 및 경제협력 여건
- III** 체제전환국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 IV** 북한의 경제성장 전략
- V**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대북경협방안

통일한국을 위한 대북경협확대 방안: 북한의 경제성장과 남북경협

I. 서론 : 연구의 주요내용

- 1

✓ 북한경제의 실태 및 경제협력 여건

 - 정량적 여건(현황/추세): 북한의 거시경제 지표, 수출입 및 FDI 유치 등
 - 정성적 여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경쟁력 지표 등

2

✓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 저소득국가, 체제이행국가 및 일반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성장 결정 요인을 분석/비교
 - 분석결과와 의미 검토 및 북한에 대한 시사점 검토

3

✓ 북한경제의 성장전략 및 이를 위한 대북경협방안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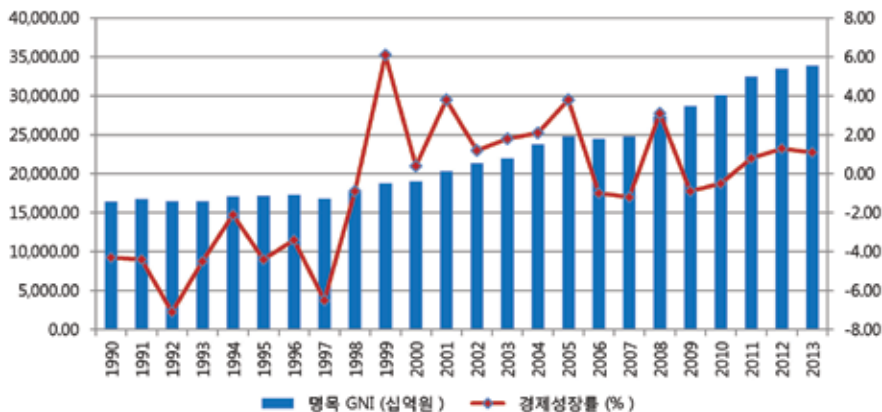
 - 개혁정책의 순서와 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바탕으로 체제이행 정책 집행순서를 제안하고, 요인별 성장제고방안을 도출
 - 또한 북한경제발전 단계별로 우리정부가 추진할 대북경협방안을 도출

3

II. 북한경제의 실태 및 경제협력 여건

- ✦ 2000년대 초반 북한경제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아직 1990년대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

북한의 경제성장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4

II. 북한경제의 실태 및 경제협력 여건

- 북한의 산업(생산)구조는 농림어업과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이나, 최근 두 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광업 및 서비스 부문의 생산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북한의 연도별 산업구조 현황

산업	1990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농림어업	27.4%	30.4%	25.0%	20.8%	23.1%	23.4%	22.5%
광공업	40.8%	25.4%	28.9%	36.3%	36.5%	35.9%	35.6%
광업	9.0%	7.7%	9.9%	14.4%	14.6%	14.0%	14.5%
제조업	31.8%	17.7%	19.0%	21.9%	21.9%	21.9%	21.1%
경공업	6.2%	6.5%	6.7%	6.6%	6.5%	6.7%	6.7%
중화학공업	25.6%	11.2%	12.4%	15.3%	15.4%	15.2%	14.4%
전기가스수도업	5.1%	4.8%	4.3%	3.9%	3.1%	3.5%	3.7%
건설업	8.6%	6.9%	9.6%	8.0%	7.9%	7.8%	7.9%
서비스업	18.0%	32.5%	32.2%	31.0%	29.4%	29.4%	30.2%
정부	11.0%	22.6%	22.6%	22.4%	21.2%	21.3%	21.7%
기타	7.0%	9.8%	9.6%	8.6%	8.1%	8.2%	8.5%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II. 북한경제의 실태 및 경제협력 여건

- 북한은 2000년대 이후 교역규모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중국 교역에 대한 의존경향은 더욱 심화
 - 2013년 북한의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77.2%(남북교역을 제외하면, 89.1%)

북한의 국가별 교역 현황(2013년 기준)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 합계	
	금액(백만\$)	비중	금액(백만\$)	비중	금액(백만\$)	비중
중국	2,914.0	76.0%	3,633.0	78.2%	6,547.0	77.2%
한국	615.0	16.0%	521.0	11.2%	1,136.00	13.4%
러시아	7.7	0.2%	96.5	2.1%	104.2	1.2%
인도	34.9	0.9%	63.1	1.4%	98.0	1.2%
태국	10.6	0.3%	85.0	1.8%	95.6	1.1%
싱가포르	1.5	0.0%	59.3	1.3%	60.8	0.7%
대만	37.5	1.0%	3.0	0.1%	40.5	0.5%
홍콩	6.4	0.2%	26.2	0.6%	32.6	0.4%
우크라이나	1.4	0.0%	26.3	0.6%	27.7	0.3%
브라질	11.0	0.3%	16.5	0.4%	27.4	0.3%
방글라데시	26.5	0.7%	0.3	0.0%	26.7	0.3%
총계	3,833.4		4,647.4		8,480.8	

자료: KOTRA(2014) "2013년 북한 대외무역동향"

II. 북한경제의 실태 및 경제협력 여건

- 다만, 세금납부횟수, 세율 측면에서 북한의 세제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북한(개성공단)	중국	베트남
세금 납부 횟수	5	7	32
기업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세율 14% (장려부문 10%) 이윤발생 이후 5년간 면제 / 3년간 50%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세율 25% 고도신기술기업 15% 영세기업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세율 22% 우대지역·산업, 낙후 지역으로 투자확대 시 10% 세율적용 (15년간) 및 4년 면세
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가액에 0.1%~1.0% 세율 적용 건물 소유등록 후 5년간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가격의 70%에 대해 1.2% 세율 적용 건물 소유등록 후 3년간 면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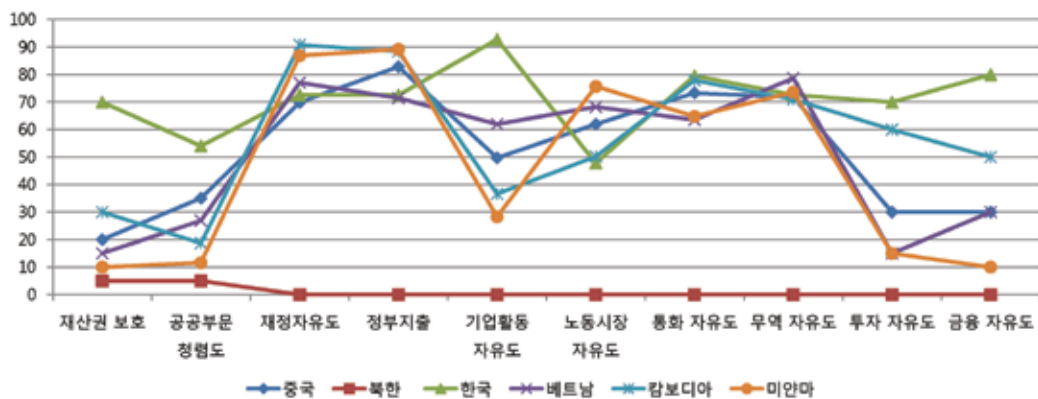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5); 한상국(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중국편」, KOTRA(2013) 「신흥지역 투자진출 리스트와 기회 포럼」 발표자료 p. 16;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3」

7

II. 북한경제의 실태 및 경제협력 여건

- 북한의 경제자유도는 전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베트남 및 캄보디아, 미얀마 등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

북한의 경제자유도 지수(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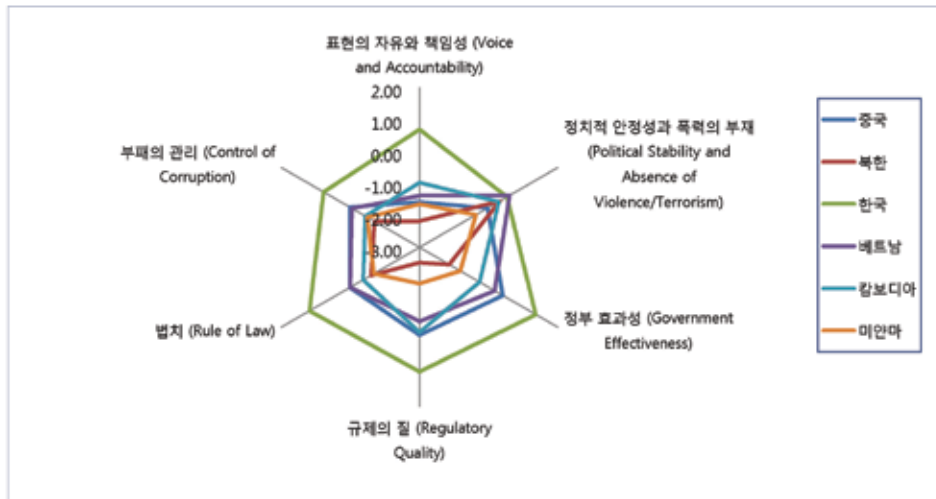


자료: 헤리티지 재단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2014"

8

II. 북한경제의 실태 및 경제협력 여건

- ✦ 통치구조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부분의 지표가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 다만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의 부재' 요인은 상대적으로 양호



자료: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2013"

III.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결정 요인 분석

▶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결과

- ✦ 일반변수: 국내투자, 인적자본, 수출비중, 인플레이션율, FDI, 제도적 여건이 유의
- ✦ 체제전환변수: 소규모 사유화, 기업 구조조정, 무역/외환 시스템이 유의

추정방법	전체 국가		저소득 국가		체제이행국가	
	고정효과	시스템GMM	고정효과	시스템GMM	고정효과	시스템GMM
일반 변수	인적자본	+	+		+	
	국내투자	+	+	+	+	+
	수출비중	+		+	+	
	인프라	+	+			+
	인플레이션율	-				-
	외국인직접투자				+	+
	제도적 여건	+	+	+		
체제이행 관련 변수	대규모 사유화					
	소규모 사유화					+
	기업구조조정					+
	가격자유화					
	무역/외환시스템					+
경쟁정책						

III.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결정 요인 분석

▶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결과의 의의 (1)

✦ 인프라

- 저개발국의 경우 국내투자에 비해 인프라 변수의 유의성 낮음 ⇒ 인프라 투자에 앞서 생산능력 증대 필요
- 체제이행국은 저개발국에 비해 생산능력 보유 ⇒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적자본

- 저개발국은 초등교육, 문자해독률, 건강상태 등이 중등이상 교육보다 중요
- 체제이행국은 비교적 소득이 높고 산업구조가 고도화 ⇒ 인적 자본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

✦ 수출비중/인플레이션

- 저개발국: 내수의 기반이 약하므로, 수출이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
- 체제이행국: 사회주의 말기 생필품 부족 및 가격자유화로 인플레이션 저감 등 경제안정화가 핵심적인 목표

11

III.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결정 요인 분석

▶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결과의 의의 (2)

✦ 제도변수(정부효과성, 규제의 질, 법치주의, 부패통제변수 등)

- 저개발국의 경우 이 변수가 성장을 가로막는 경우가 다수
- 다만, 체제전환국의 경우 유의하지 않음 ⇒ 더 근본적 제도변수(사유재산제 등) 존재

✦ 사유화

- 소규모 사유화가 대규모 사유화에 비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남.
- 대규모 사유화는 직접적 성장을 제고효과보다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식(간접적 방식)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무역과 외환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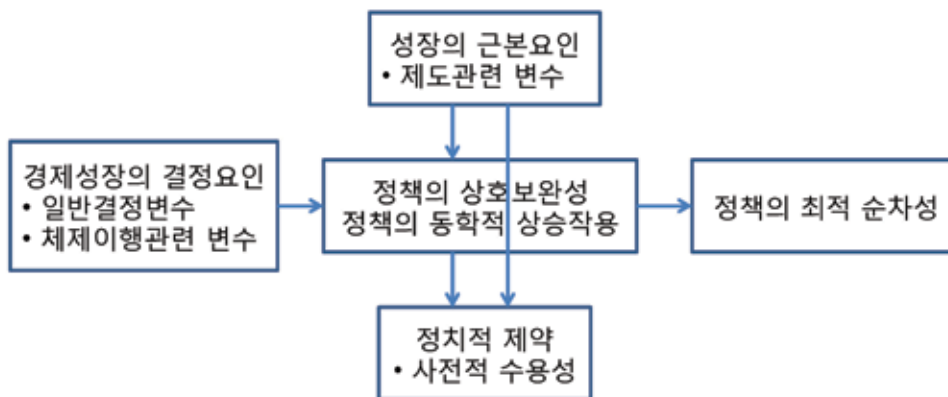
- 화폐의 태환화, 시장경제체제의 부합되는 환율제도는 체제이행국의 무역 증가에 필수적 요소
- 적절한 환율제도 운용으로 외국에서의 소비재 및 생산재 수입이 가능 ⇒ 인플레이션 저감 (즉, "경쟁의 수입" 효과 발생)

12

IV. 북한의 경제성장 전략

북한 경제성장 정책의 순차성 고려 시 판단기준

- ✦ 성장의 근본 요인으로서 제도에 대한 고려
- ✦ 정책의 상호보완성과 동학적 상승작용 고려
- ✦ 정책의 정치적 제약에 대한 고려



13

IV. 북한의 경제성장 전략

북한의 제도개혁 추진과제 (1)

- ✦ 북한의 집단 농장 운영방식과 이익배분 방식의 개혁: 집단농장의 운영방식을 개별 가족농 중심으로 전환
 - 집단농장의 토지를 가족에게 분배하고, 수확물 중 일부는 이전방식으로 국가가 수매하되 나머지 부분은 그 가족에게 자유 처분권을 부여하는 방안
 - 수확물 배분은 정률제가 아닌 정량제를 적용(중국의 농가책임제 방식) ⇒ 높은 인센티브 효과 기대
 - 집단농장이 수매 물량의 공급을 책임지도록 개별 농가가 아니라 집단농장과 계약하면 집단농장도 유지 가능하면서 행정 비용의 부담도 줄이고 인센티브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음.
 - 집단농장에 정부 수매와 개별 가족농의 수확물 배분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 여러 집단농장에서의 실험을 통해 가장 정권 유지 측면에서 부담이 적고 생산량 증가 효과도 큰 배분율을 정할 수 있을 것임.

14

IV. 북한의 경제성장 전략

▶ 북한의 제도개혁 추진과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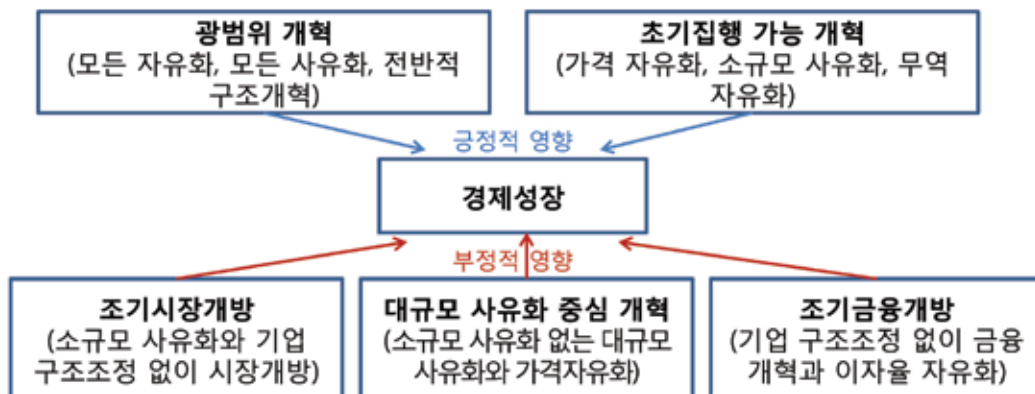
- ✦ 기업재산의 개인양도를 통한 소규모 상업 및 기업활동을 인정 및 장려
 - 북한에서는 현재 기관이나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개인들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개인사업을 묵인하는 현재 정책에서 더 나아가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
 - 다만 기업 활동의 자유를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 한정하고, 이러한 정책적 실험이 성공하면 이를 단계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으로 확대
- ✦ 시장거래 활동 자유화
 - 현재 북한에서 성행하는 시장거래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이를 보다 자유화
 - 즉, 거래 제한 품목을 최소화하고, 거래참여자의 제한 철폐
 - 일반적인 상업활동에 대해 간단한 등록 혹은 등록절차 없이 자유로운 거래활동 중사가 가능하도록 함.
 - 단, 정부가 장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 활동은 경우는 일종의 세금이나 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

15

IV. 북한의 경제성장 전략

▶ 제도개혁의 순서와 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 ✦ 가격자유화, 소규모 사유화, 무역자유화가 체제이행 초기에 이루어져야 경제성장이 제고
- ✦ 광범위한 개혁은 장기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개혁의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



16

IV. 북한의 경제성장 전략

▶ 기타 요인별 북한경제성장 전략/정책과제 (1)

✦ 투자촉진

- 북한의 경제주체들에게 창업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부여할 필요
 - 단,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시작, 점차 큰 규모의 기업으로 확대
-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책적/법적/제도적 안정성이 보장될 필요
 - 김병연/정승호(2014)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은 대북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북한 국내정책의 잦은 변화를 지적

✦ 인프라 개선

- 인프라 구축은 북한내 자본으로는 한계 ⇒ 남한 등 국외 자본 활용 필요
- 이를 위해 북한의 수용성가 법적, 제도적 안전보장 장치 필요
- 따라서, 점진적 방식의 인프라 투자 필요
 - 초기: 북한 생산능력 제고가 필수 ⇒ 인프라 건설은 필수적인 운송과 물류관련 인프라 건설로 제한
 - 중기: FDI 크게 증가하는 단계 ⇒ 생산, 운송, 물류와 관련된 기초인프라 투자 증가
 - 장기: 북한 개혁의 완성단계 ⇒ 공항, 철도,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생산 및 수출능력을 증대시킴

17

IV. 북한의 경제성장 전략

▶ 요인별 북한경제성장 전략/정책과제 (2)

✦ 인적 자본개발

- 초기: 북한주민의 신체적 건강 유지, 북한의 의무교육제도(11년)의 정상적 이행에 초점
- 중장기: 고등교육에 초점, 외국인투자기업이 요구하는 고숙련 근로자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준비 필요

✦ 인플레이션 해소 등 거시경제적 안정성 유지

✦ GDP 대비 수출

- 북한 산업 중 가격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류임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수출전략 필요
- 수출확대는 북한정부에서도 원하는 바이므로 정치적 제약은 없을 것

18

IV. 북한의 경제성장 전략

▶ 단계별 북한경제성장 전략/정책과제

- ✦ 초기정책(소규모 사유화 및 가격자유화)는 북한정부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정책
- ✦ 중기 및 후기 정책은 남한 및 국제사회의 협조가 절실
 - 무역/외환거래시스템: 기술지원, 외환시장 개설 및 제도 수립/유지 등 지원
 - 대규모 사유화: 기업의 평가/매각에서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필요
- ✦ 초기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북한주민 영양상태 증진 및 필수 인프라 개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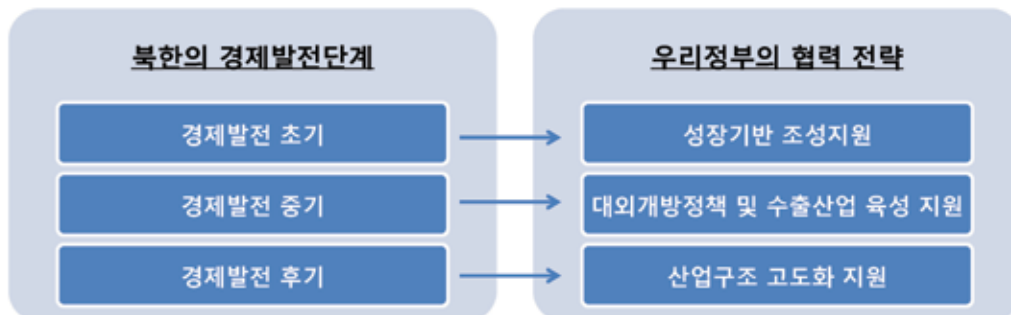
기간	초기	중기	후기
근본제도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농 중심의 이익 배분 •소규모 상입/기업활동 인정 •시장거래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투자의 법적/제도적 안정성 보장 	
체제이행 관련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사유화 •가격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 및 외환거래 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사유화 •경쟁정책 도입 •기업 구조조정
일반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자본 중 주민 영양상태 개선 •필수 인프라 개선 •외국인직접투자 제고 •인플레이션 저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을 통한 성장 •인적자본 중 중등교육 강화 •재정적자의 화폐발행 보전 지양 •기초 인프라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자본 중 고등교육 강화 •대규모 인프라 투자

19

V.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대북경협방안

▶ 북한 경제발전 단계와 우리정부의 협력 목표

- ✦ 북한 경제발전 초기, 중기, 후기에 각각 부응되는 우리 정부의 협력 전략 도출
 - 경제 발전 초기: 북한의 근본 제도변수와 체제이행 관련 변수의 진전이 있는 단계 ⇒ 북한의 자생적 성장 동력이 점화되는 기간 ⇒ 북한 경제의 성장 기반 조성에 초점
 - 경제발전 중기: 북한 경제 체제의 이행이 본격화, 대외개방 및 투자여건 성숙 ⇒ 대외개방과 수출산업 육성을 지원
 - 경제발전 후기: 대규모 사유화 등 체제이행 완료/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 북한산업 고도화 촉진 지원



20

V.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대북경협방안

▶ 북한경제개혁을 위한 우리정부의 3대 협력방안(개요)

협력전략		초기	중기	후기
협력전략		성장기반 조성 지원	개방 및 수출산업육성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경제정책 지원	근본 제도 및 체제 이행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을 통한 지식공유사업' 추진 -> 근본 및 체제이행 제도 개선 지원 (가혹한 제도 개선, 소상공 활동 인정 (시장거래 가격 자유화, 소규모 자유화)) • '북한경제정책 협의회' 구성-정책 자문 -> 거시경제정책 경험 공유 및 협력 (인플레이션 및 재정정책 방향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대외경제연구원' 설립-지원 -> 체제이행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 -> 정책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주도 (무역 및 외환시스템) 	
	정책 지원 기구 설립			
경제협력 지원	일반 성장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인도적 지원 (주인생양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 & 직업훈련 재정 지원 (중등교육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투자 및 운영 지원 (고등교육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개성공단 국제투자유치 지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전·후방연관효과 제고 (수출을 통한 성장 기여 지원) • 개성 외 경제특별구 투자 확대 (수출을 통한 성장 기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첨단산업구조로 전환 (차질금가중→IT첨단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기반용 교통-물류 지원 (철수 인프라 개선 지원) • '북방 3각 협력 참여' (남북러 나간-핵산 물류투자 참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특구 연계용 인프라 지원 (기초 인프라 투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지원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원) • 동북아 인프라 연계 지원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투자 유치 지원 (외국인투자) : 개성공단 → 경제개발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 '북한개발지원그룹' 구성 지원 -> 북한신식기상 조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 지원 (북한 대규모 투자재원 지원 등)
경제외교 지원	경제외교 지원	양자 협력	다자 협력	

자료: 정형근 외(2014)

21

V.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대북경협방안

▶ 협력방안 1: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지원

- + 초기 : 제3국을 통한 지식공유사업을 통한 우회적 지원 및 남북 당국자간 정책협의회 구성
 - 초기는 소규모 상업/기업활동이 인정, 시장거래 확대, 가격 자유화 및 소규모 사유화가 실행되는 시기 ⇒ 이와 관련한 제도도입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문 및 기술적 지원 제공 필요
 - 단, 북한의 수용가능성 고려 시, 제3국을 통한 지식공유사업 추진 필요
 - 또한 가치 '북한경제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남북 간 경제협력은 물론 거시경제정책 안정을 위한 협력을 추진
- + 중기 이후 : 북한대외경제연구원 설립 지원
 - 북한경제가 공식적 체제이행 선언을 한 이후의 단계 ⇒ '북한대외경제연구원' 설립을 통해 보다 체계화된 체제이행 연구 및 정책연구지원 필요
 - 우리 정부는 동 연구원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전문연구인력 교류를 추진하고, 세계 각국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지원
 - 체제이행 시 파급효과는 큰 무역 및 외환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의 경험과 체제이행국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국제협력 창구역할 수행

22

V.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대북경협방안

▶ 협력방안 2: 인도적 및 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지원 (1)

✦ 인적자본 투자지원 방안

- 초기 : 주민영양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
 -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와 병행하여 추진
 - “다른 공여국이나 공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
- 중기 : 북한 의무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등 중등교육 강화 지원
 - 우리정부가 직접 북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시도
 - 낙후된 북한의 의무교육 시설을 개선하고 수출산업과 연관된 직업교육시설을 마련
- 후기 :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
 - 낙후된 북한의 고등교육시설 투자지원 및 운영, 북한의 중등·고등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사·교수요원 지원 등 추진
 - 해외의 우수 고등교육기관들이 그 운영 경험을 살려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23

V.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대북경협방안

▶ 협력방안 2: 인도적 및 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지원 (2)

✦ 물질자본 투자지원 방안 (1): 경제특구 지원방안

- 초기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 북한 당국이 정치·안보 불안 완화, 3통 문제 해결 등 개성공단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향적 자세로 전환할 필요
- 중기 : 개성공단의 전후방 연관효과 제고 및 개성 이외의 경제특별구 지원
 - 북한의 부품 공급업체들과의 연계(후방연관효과), 북한 내부시장에의 공급(전방연관효과) 허용 등 추진, 나아가 북한 내부 수출기업들의 개성공단 입주를 유도
 - 개성공단 외 지역(나진, 신의주 등)의 ‘경제특별구’로 우리정부의 투자확대 필요
- 후기 : 개성공단 산업의 고도화 지원
 - 저임금 노동력 중심의 업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IT 등 첨단산업 기술업종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

24

V.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대북경협방안

▶ 협력방안 2: 인도적 및 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지원 (3)

- ✦ **물적자본 투자지원 방안 (2): 인프라 투자지원 방안**
 - **초기 :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 투자지원 및 북방 3각 협력 추진**
 - 북한 내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산업 인프라를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
 - 북방 3각 협력을 통해 북방지역에 인접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북 투자와 연계 필요
 - **중기 : 개성 외 경제특별구로 투자 지원 확대 및 남북 연계 인프라 투자**
 - 개성공단 이외의 경제특별구(일종의 제2의 개성공단) 개발에 따라 남한과의 연계 교통망/에너지망에 대한 인프라 투자지원 확대 필요
 - 북한내부 경제특별구간 연계 제고를 위한 기초 인프라 투자지원 필요
 - **후기 :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국제사회와 함께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한 북한의 개발 지원에서 우리정부의 주도적 역할 필요 ⇒ 북한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재원 마련 및 동북아 경제교류협력 확대에 기여
 -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 개발 계획들과 유기적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역내 안전보장 체계도 보완

25

V.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대북경협방안

▶ 협력방안 3: 대외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제외교지원

- ✦ **초기: 개성공단의 국제투자 유치 지원**
 -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 단계로 국제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상태 ⇒ 외국인직접투자 등 국제투자유치를 양자 협력 중심으로 지원
- ✦ **중기: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및 북한개발지원그룹 구축, 북한에 대한 양자적인 국제투자 유치지원 강화**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초기 단계 ⇒ 북한의 경제 개발과 지원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체로 가칭 '북한개발지원그룹' 구축 필요
 - 동 그룹은 북한과의 정기적인 정책협의 및 북한 개발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 자원조달을 주도
 - 또한, 원조 공여자 간 원조 조정 및 조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
- ✦ **후기: 국제사회의 다자간 협력 심화 유도 및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추진**
 -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의 다자간 협력을 심화시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과 같은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 ('북한개발지원그룹'을 확대 개편)
 - 우리정부가 주장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추진 ⇒ 북한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동북아지역의 인프라 연계 투자를 지원

26

감사합니다

KISP 대한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Presentation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학 력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경제학 박사(Ph. D.)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중앙대학교 경제학 학사

| 경 력

1997.12 –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01 – 현재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2013.03 – 현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2012.03 –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2009.03 – 2014.02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2003.08 – 2006.12	동북아시아위원회 전문위원
1997.08 – 1997.11	중앙대, 광주대 경제학과 강사
1996.08 – 1997.06	동국대 북한학과, 조선대 경제학과 강사

| 논 문

박사학위 논문제목: North Korea's Foreign Trade, 1962–1992

통일과정에서 남북경협의 역할 확대 방안의 모색

임강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문제 제기

박근혜 대통령이 년초 ‘통일대박론’을 대북·통일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범사회적 조직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약칭, 통준위)를 출범시키면서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통일준비’가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아직까지 통준위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통일준비를 위한 우리 사회의 역량을 확대해 나갈지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커다란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일에 따른 충격이라는 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남북관계가 장기적으로 경색되어 있어 남북한 모두 통일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북한이 우리와의 통일을 전격적으로 요구해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내부에서 정치·안보·행정·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혼란의 여파가 직간접적으로 남한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우리 사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대박의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통일의 상황에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위기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작업은 통일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격차를 최소화하면서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호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과 함께 통일 상황과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발표문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의 경제통합을 촉진시킴으로써 점진적이

고 평화적인 통일의 가능성을 키우는 노력과 함께 통일 상황에서 제기될 경제적·사회적 혼란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협력 방안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될 것이다.

II. 통일한국으로 가는 단계적 접근

통일한국은 완성된 결과를 의미하며 거기까지 도달해 가는 과정에는 다양한 단계들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면서 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 통일 직전 상황까지 도달하는 단계(통일기반구축단계)

통일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는 통일 상황에 도달해 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대부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화롭고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담겨있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대북 경제협력이 통일준비라는 차원에서 추구할 필요가 있는 목표는 통일의 상황이 가능한 빠르게 실현되고 통일 상황에서 남북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크지 않도록 남북한의 경제적·사회적 이질성과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통일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단계(통일가시화단계)

북한의 대내외적 변화 및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충격과 내부의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북한 내부에서 남한과의 통일을 추진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 남한과의 통일에 합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통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선호가 분명해야 할뿐만 아니라 북한의 군부를 비롯한 권력계층이나 엘리트계층에서 남한과의 통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국들이 북한의 남한과의 통일을 선택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즉, 주변국가 및 국제

사회의 묵시적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 단계가 지니고 있는 특징들이 대북경협에 시사하는 점은 첫째,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협사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주민들에게 절실한 식량 및 식료품 생산 및 경공업제품 생산과 관련된 경제협력에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변국들과 함께 대북경협에 참여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가의 자본이 참여하는 3각 협력이나 다자간협력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통일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단계(통일협상단계)

북한 내부의 결정에 따라 남북이 공식적으로 통일을 위한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권력의 공백 가능성이 커지며, 이로 인해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와 기존에 국가가 제공해왔던 전력 과 통신, 교통, 유통 등의 제반 분야에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지역에 일종의 긴급 상황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지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주식 및 외환시장,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국 차원에서는 이 기간이 지나는 위기적 요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국가적 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단계가 지니고 있는 위기적 요소들이 대북경협에 시사하는 점은 북한의 시장화와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북한지역의 긴급한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북한의 내수시장과 관련된 경협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남북한 통합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통일국가 건설단계)

남북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분야별 통합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경제분야에서는 사유화와 민영화, 화폐통합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와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 보건의 서비스 제공 문제도 통일한국의 주요 정책 과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중요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과제는 북한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남한경

제와의 보완적인 협력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발전수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가 지니고 있는 성격들을 고려할 때, 대북 경협은 남북한 경제통합을 촉진하면서 북한지역 경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인 분야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소 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경제협력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남북 경제협력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경제협력의 역할을 통일 상황에까지 도달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한국 건설이라는 큰 틀에서 남북경협을 조망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표 1> 통일 진행 단계별 경제협력의 역할

단계 구분	주요 특징	통일준비를 위한 경제협력의 역할
통일기반구축	통일의 상황에 도달해 가는 기간	남북한의 경제적·사회적 이질성과 격차 해소
통일 가시화	북한이 남한과의 통일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	북한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기여, 주변국들과 함께 대북경협 추진
통일 협상	남북이 통일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북한의 시장화와 대외개방을 촉진, 북한 내수시장 관련 경험 확대
통일국가건설	분야별 통합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남북 경제통합과정 촉진

III. 통일과정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목표와 극복 과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한국을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경협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남북경협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이견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북한과의 관계 및 북한체제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대북퍼주기’론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으며,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제재조치(‘5.25조치’)로 인해서 경제협추진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한국 건설이라는 큰 비전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에서 남북경협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와 추진방향의 설정을 통해서 체계적·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내외적 충격에 의해 쉽게 변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목표와 추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통일준비를 위한 남북경협의 역할이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남북 경제협력의 목표

<남북 경제협력의 3대 목표>

- 남북 경제력의 격차 축소
- 남북 경제의 이질성 해소
- 남북 주민들의 상호 친화력 제고

가. 남북 경제력의 격차 축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경협의 최우선 목표를 남북한 경제력 격차 줄이기에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경제력’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복합적인 함의를 고려할 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력의 사전적 의미는 “생산력이나 자본 파워를 가지고 경제 행위를 해 나갈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되는데, 경제력에는 단순히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기술수준, 생산 및 자본동원 능력과 소비수준 등이 다양하게 포함된다.

남북 경제력 격차 해소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수준을 빠르게 증가시킨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를 통해서 북한주민들의 경제수준 향상과 자신감 회복, 그리고 통일에 따른 충격 완화 및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상호인식을 제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 경제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남북경협은 일차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통일에 따른 비용은 줄이고 편익을 증대시키자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나. 남북 경제의 이질성 해소

남북경협의 두 번째 목표는 이질화가 심화된 남북 경제의 동질성 확대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점진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북한 경제체제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완화시켜 나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북한경제 내부의 개혁·개방이 촉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북한경제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통일한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남북 경제의 동질화는 단순히 남한의 시장경제시스템을 북한지역에 이식하는 작업을 뛰어 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남북통일에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은 지경학적인 한계를 뛰어 넘는데 더하여, 남한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고령화·저성장, 일자리 부족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경제모델의 창출 가능성을 꿈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본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 '사회적 시장경제'가 새로운 경제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보편적 복지' 실현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는 특히 사회주의 통제경제에 익숙하고, 경쟁체제에 덜 준비된 북한지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돕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논리에 우리 사회가 동의할 경우, 남북경협에 사회적 시장경제를 결합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모델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 남북 주민들의 상호 친화력 제고

통일한국을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남북통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국가 건설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과제는 남북주민들의 정서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¹⁾ 결국

우리 사회가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통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 될 것이며, 통일이 되더라도 갈등과 분열로 사회적 혼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부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지속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접촉을 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한 민족으로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남북한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과 민족적 정체성과 동질성을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협력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2. 극복 과제

앞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산재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다루어가면서 경제협력을 통해서 상기한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문제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핵문제에의 악화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을 협력상대로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가 북한에 대한 지원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된 계기도 북한의 핵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자위 차원에서 핵무장을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손에 핵을 가진 북한과 협력을 위한 악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남북 경제협력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정부는 핵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핵무장한 북한이 주는 거부감과 공포가 협력의 손을 내밀기 힘들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당분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²⁾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핵을 가진 북한이

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14 남북통합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09년 75.7%에서 2013년에는 66.6%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대북투자사업에 대한 우호도는 2009년 64.1%에서 2013년 85.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주민들의 대남한 선호도 계고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4 남북통합지수』 pp. 137-145.

2)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된 헌법에 핵무장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

더 이상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핵이 주변에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보일 경우, 우리는 경제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핵 문제 해결과정과 경제협력을 느슨한 형태로 연계시켜 나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나. 남북관계의 경색 및 불안정성

북핵문제 못지않게 경제협력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남북관계이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나 비난, 또는 군사훈련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경제협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5개월 넘는 장기간 조업중단 사태를 맞았던 개성공단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격랑기에도 유지되어 왔던 개성공단이 폐쇄직전까지 가면서 남북경협이 남북관계에 자유로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성공단의 조업이 중단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개성공단의 외국 바이어들이 대기 등을 돌리게 되었으며, 개성공단 입주를 준비하던 기업들도 동남아등지로 눈을 돌리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에 경제협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미 국제자본이 대기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불확실성이 큰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남북 경제협력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국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민간의 경협부문에 대해서는 정경분리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책임 하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 국제사회와 우리의 대북경제체제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취해진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체제에 대하여 천안함 폭침사건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으로 부가된 경제체제 조치가 경제협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남북경협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라고 할

의를 개략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

수 있다.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경제체제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제체제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남북 경제협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5.24조치'의 해제에 대한 요구가 대북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유엔의 제재조치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5.24'조치를 해제할 명분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으로서도 천안함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조만간 우리 정부가 경제체제를 해제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정부가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진-하산철도연결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등 선별적으로나마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5.24조치' 해제에 매달리기 보다는 우회적으로 허용되는 경제협력사업을 기반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분간은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영역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당면 과제

가. 경제협력 활성화의 전기 마련

경제협력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며,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간접적인 형태로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진-하산프로젝트처럼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기업과 공동투자·경영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방식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협력실적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 당국이 회담을 통해서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새 출발의 계기를 전격적으로 마련하는 방식도 추진해 볼 수 있다. 남북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창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경색국면에서도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3각협력 및 협력사업의 다국적화(국제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남북당국이 경제협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남북간 합의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어느 한쪽의 잘못된 행동으로 협력사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협력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북한당국이 받는 타격이 커지는 형태의 협력구조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개성공단처럼 대규모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북한당국으로서도 쉽사리 사업자체를 폐쇄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IV.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확대 방안

남북 경제협력이 통일한국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투자기업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창출되어야 한다. 투자기업으로서의 성공이 전제될 때, 우리가 상정한 경제협력의 목표 달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통일준비 차원에서 경제협력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별 투자사업으로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북경협사업의 추진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1. 북한의 변화하는 경제현실을 적절하게 반영

북한이 기업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개혁적인(?)’ 조치를 시범적으로 단행하면서 일부 기업들에서는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북한의 시장물가는 여전히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예를 들어 월급이 많은 오른 기업소가 20-30만원 수준을 받는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평양에서 햄버거1개 가격이 1만원, 문수물놀이장 입장료가 2만원인 사실을 고려하면³⁾ 최소한 평양에서 순수 월급으로는 기본 생계만이 가능한 상황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주민들 대부분은 여전히 외부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고 있는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용변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잘 관찰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북한경제의 실상에 적합한 분야와 방식으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북한의 중산층에서는 한국전자제품과 화장품이 인기가 높아 당국의 금지령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노무관리에서 북한주민들의 변화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과 소비 수요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북한당국 뿐만 아니라 북한 종업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한 기업들이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을 사업계획에 적절하게 반영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에서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가 북한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남한과 경제협력을 하는 이유로 경제적 유인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잉여노동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수입을 확보하면서 앞선 생산 및 경영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기술수준이 높은 제조업이나 전자·기계부문 등의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외부 투자를 유치할 때 자신들의 경제발전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문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따라서 북한의 경제정책기조에 호응하는 형태로 접근해야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에 와서 자원개발부문에 대한 투자유치정책이 변화한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중장기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북한 경제정책의 특

3) 연합뉴스, “北에도 햄버거·BMW 인기, 민간경제 확산”〈FT〉, 2014.9.2.

4) 북한의 외국인투자법(2011년 수정 보충)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부분으로,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을 명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1년 11월 29일 수정하기 전에는 투자장려부문에 ‘자원개발’부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같은 법(제11조)에서 ‘자원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자원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장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하겠다.

정은 주민생활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신년사에서부터 ‘인민생활’ 향상을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농업부문과 경공업부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의 현지지도에서도 경공업제품공장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⁵⁾ 이와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해도 요구된다. 북한은 최근 기업소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관리방식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각 지방에 경제개발구를 설치하여 외자유치를 독려하고 있는 점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

남북경협을 정부의 정책과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남북경협에 대한 정부정책은 기본적으로 대북·통일정책의 틀 내에서 수립·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이 사업추진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같을 수가 없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성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정부 정책은 대북정책을 포함하여 일반 경제정책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정권에 따라서 큰 폭으로 변해왔다는 사실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작업인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기존의 대북사업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 정부에서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나진-하산프로젝트처럼 제3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자협력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민간차원의 투자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부문에서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관련 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단, 현재로서는 북한당국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드레스덴 구상과 관련된 사업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북한의 지역적 특징에 적합한 특성화 투자

5) 김정은의 경공업부문 현지지도는 최근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양양달공장을 방문(8월 7일) 한데 이어, 갈마식료공장(8월 15일), 군 식료공장인 11월2일공장(8월 24일), 일용품생산공장인 10월8일공장(8월 31일) 등을 방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이 작년에 13개 도 단위의 경제개발구 창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6 개를 추가하면서 지방단위의 경제개발구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자유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19개에 달하는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면서 2가 지를 강조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경제의 종합적·균형적 발전과 지역적 특성화를 통한 개발이 그것이다.⁶⁾ 이를 위해서 북한은 지정된 경제개발구를 통해서 다양한 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업 개발, 농업, 관광 등 부문별 특성을 강조한 개발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토일 기자 / 20140723
@vonhao oratics(트위터)

출처: 연합뉴스, “북, 경제개발구 급속 확대…대의 경험 의지 과시,” 2014.7.24.

6) 조선신보, “도단위 경제개발구창설의 의도와 발전전망,”(조선경제개발협회 율용석국장의 인터뷰 기사) 2103.11.29

우리의 대북투자가 당분간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리적 특성과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우선 투자지역을 선정한 뒤, 패키지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형태로 진출하고 무엇보다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공사례의 창출은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5. 기존 성공사례와의 협력 및 연계 방안 모색

쉽게 말하면, 성공한 사업아이템에 편승하자는 것이다. 물론 사업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략이 100%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사업파트너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에 성공한 사례들 중에서 협력파트너를 찾는다면 상대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사례를 통해서 사업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분야에 진출한다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존 사업자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진출사업자와의 협력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중국자본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자본이 평양과 나선을 중심으로 북한의 건설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

6. 창조적 도전 정신의 발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양을 중심으로 관찰되고 있는 북한경제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 기조가 어느 정도나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많은 중국자본이 북·중관계의 경색국면에도 북한에 대한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전에 우리는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에 대달려 중국의 빠른 성장에 따른 과실을 공유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우리의 대북사업자들은 오래전부터 북한경제와 통일한국의 미래에 재원과

7)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월 16일에 착공한 동평양지구 상업거리 건설사업을 들 수 있다. 대규모 상업유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중국의 대중화국제투자집단유한공사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신보, “동평양지구 상업거리건설 착공/ 조중 건설자들이 협력,” 2014.1.17.

시간을 투자하신 분들이다. 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분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조금은 이른 감이 없지는 않지만, 북한의 내수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도 통일한국의 건설을 위해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V. 맺음 말: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남북경협을 활성화하여, 통일과정에서 남북경협의 역할을 제고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정부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경협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약간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거시적 접근

가. 남북한 경제적 상호보완성 제고

남북경협이 남북 양쪽에서 지속가능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남한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북한과의 경협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남한경제는 고생산비용구조의 극복과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경제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자원 확보 및 선진기술 도입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생각하면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할 경우 서로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은 자신들의 단순 노동력만을 활용하는 협력사업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노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협력분야를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하거나 대륙으로 직접 연결되는 물류망을 이용하여 남북이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남북경협을 통해서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의 창을 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나.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균형 발전

북한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공단개발과 같이 대규모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개성공단처럼 공기업의 참여가 요청되는 상황이 대두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한반도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균형 발전을 정책적으로 지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균형발전은 북한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지방경제의 발전방향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외부의 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기를 희망한 지역 중에서 남북한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큰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점, 선, 면 방식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대북투자기업에 대한 정책 접근

가. 민간부문의 대북 경협활동에 대한 자율성 보장

통일 준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간부문의 경제협력은 남북한이 정치적·경제적·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기업들의 대북한 경제적 접근을 정부의 정책기조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대북투자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규제완화를 대북경제협력 영역에도 과감하게 적용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고민해 보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자원의 경협활동에 대해서는 정경분리 원칙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경제협력의 정치적 독립성을 공동으로 보장하는 합의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통일준비차원에서 경제협력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중에서 민간부문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은 정부부문이 담당해야 한다. 즉, 남북경협이 공공제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와 같이 선도적 투자는 정부부문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어 남북경협에 따르는 불확실성이 제거될 경우에는 민간부문에서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작업도 정부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선-햇산프로젝트와 같이 대규모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정부부문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부문의 대북경제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통일한국 건설의 경제일꾼으로 양성

정부는 통일 준비를 위한 경제협력의 역할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북사업자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동안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던 대북사업자들을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선봉대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경협과 관련한 그들의 노하우와 열성은 통일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 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작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이 화학적으로 잘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정서적 통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북한과의 협력 경험이 있는 사업자들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 들이 자신의 꿈을 다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사회주의 체제전환 시기에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협력사업의 경험이 있는 기업과 관리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Presentation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 학 력

독일 국립프랑크푸르트대학 경영학박사 (Dr.rer.pol)

| 경 력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인문대 교수/ 독일어과 학과장, EU통상/ 수출, 경영전략 담당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영연구실장/ 판로유통연구실장 역임
2006 – 2007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예산사정조정위원 (수출판로분과위원장)
2006 – 2007 대통령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산업/ 재경분과자문위원
20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소기업 R&D협의회 위원
중소기업청, 규제심사위원/ 갈등심의위원/ 정책평가위원/ 공공기관장 경영실적 평가위원장,
공동브랜드대전/ 지속가능경영대상/ 한국유통대상/ 프랜차이즈대상/ 국가품질대상 심사위원(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진흥원/ 소상공인공단, 서울시등 자문/ 심의/
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저서/논문

EU통상과 수출경영 등 약 75편

| 수 상

2011 국가산업발전 공로 대통령표창 (지식산업 컨설팅분야)

2014 통일 포럼

통일한국을 위한 대북경협 추진전략

2014-09-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동덕여대 인문대 김익성교수

C O N T E N T S

1. 대북경협의 확대 배경
2. 대북경협의 의미와 중대성
3. 독일 통일의 교훈/사전대비
4. 성공적인 대북경협 추진전략
5. 대북경협 조직화 방안

1. 대북경협 확대 배경

- **통일에 대한 사전준비의 필요성 대두**
 - 현대경제연구원 : 통일인식 조사
 - 5년 이내: 3.1%, 6~10년 22.1%, 11년 이상 55.4%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 재단 향후 15년 내외예상
 - 통일준비: 국내 중소기업 1.7% 에 불과 (IBK경제연구소 2010년)
- **통일대박에 대한 기대**
 - 한반도 전쟁리스크 해소에 따른 연간 36조 국방비 감소(GDP의 3%대)
 - 한반도내 신용회복에 따른 해외투자 증가
 - 경제통합에 따른 생산투자확대 > 내수증대 및 수출호조 (10년 조정기간후 연 경제 성장률 11% 기대)

1. 대북경협 확대 배경

- 현대경제연구원: GDP: 2030년 3조2,800억\$/일인당43,000\$, 2050년 6조560억\$/ 일인당86,000\$전망(현대경제연구원)
- 통일연구원: 통일후 20년간 비용 4000조 편익은 6300조 추산
- ※ 통일후 한국은 30~40년내에 GDP규모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능가 ('14.4월, 골드만삭스 참조)

■ 대륙과 해양 연결 ⇨ 동북아 유라시아 시대 개막



1. 대북경협 확대 배경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행복한 통일시대 구현”과 드레스덴선언의 구현
 - 국정과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남북관계를 정상화
 -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을 지향: 그린데탕트/경제공동체
 - 통일대비 역량 강화: 통일 외교
 - “남·북 평화통일 조성을 위한 3대 원칙 실천”
 - 1대 원칙: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 2대 원칙: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 3대 원칙: 남북 주민간 동질성

1. 대북경협 확대 배경

-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조치에 따라 남북경협의 연계방안강구 필요성
 - 국가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 합영투자위원회 구성
 - 자원개발, 경제개발 특구 및 단지 조성 등
 - 철도,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SOC개발 > “비전코리아” Proj.
 - 금융 및 외자유치 확대(중국 등 12개국 투자유치 협정)> 국제금융기구가입 지원
- ❖ 인터넷/ 모바일 이용확산에 따른 글로벌화는 북한의 고립화를 심화시킴으로써 북한 경제개방을 압박
- 대북경협 남북간 신뢰 형성 수준과 비핵화 등 정치/ 군사적 관계기조가 향후 진전의 관건
 -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경협기금 2007년 7157억> 2012년 693억원 1/11 감소>2013년 2957억 확대> 인도적 비상업적지원사업확대
 - 전략적 경협 필요성 대두

2. 대북경협의 의미와 중요성

- **대북경협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동인이자 신뢰구축수단**
 - 북한 경제개방과 개혁의 연착륙 지원
 - 북한내 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비핵화 등 정치군사적 진전을 위한 압박 및 유인 기능
 - ☞ **정치군사적 긴장상태 시에도 대화채널 활용가능**

- **통일 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문제 현상의 사전 제거**
 - 북한 지역내 발전지속을 위한 인구이동의 억제
 - 북한과 한국의 통일후 생산 및 소득격차의 최소화

2. 대북경협의 의미와 중요성

- **미래 통일의 고비용 사전제거를 위한 전제적 투자**
 - 통일 이후에 경제개발 및 산업발전의 지속화 추진을 위한 동력원
 - 사전투자: 활용편익을 통한 비용축소

제안 기관	비용추산액
통일연구원	20년간 4000조
현대경제연구원	10년간 188조 4000억
삼성경제연구소	10년간 545조 8000억
월스트리트저널	30년간 최대 5800조
미스탠퍼드대학 피터백연구원	30년간 2300조~5800조
안종범 성균관대교수	30년간 734조~2757조 2000억
미래기획위원회	30년간 2568조

2. 대북경협 의의와 중요성

- 대북경협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외교적 협력을 위한 전제적 포석이자 평화유지 수단
 - 대북경협의 확대는 한반도 평화 유지와 통일유인을 위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
 - 국제사회의 지원을 위한 동기유인

- 대북경협은 남북관계의 관리적 목적 외에
-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 정책으로 인식하고 확대
- 한국의 동북아 경제 및 정치외교적 위상과 이익확대
- 대북경협 = 통일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의 초석

3. 독일 통일의 교훈/사전대비

- 내독거래(Inner -deutsche Handel)를 통한 자원보조 및 교역특혜: 관세법/대외무역법 비적용
 - 동독상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면(14%.11%)
 - GATT나 EC로 부터 동독상품을 독일상품으로 인정 > 서유럽시장에서 관세없이 판매 가능
 - 동독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동독경제의 체질강화
- 청산결제시스템을 통한 자원 및 신용공여
 - 베를린협정(berlin Abkommen)> 지역간 거래협정
 - 동서독간 중앙은행 청산계정을 통해 1:1환율을 통한 결제(청산단위 VE사용)
 - 동독의 채무불이행시 무이자 신용고여 한도설정하에 청산용 용자 (Verechnungskredit: Swing)제공
- 동서독간 경제협력 활성화에 기여
 - 1950년 7억4천DM 에서 1989까지 153억DM으로 70배성장
 - 서독은 동독의 2위 교역국> 교역의 10% 차지

3. 독일 통일의 교훈/사전대비

- **기술투자 동독지역 생산설비투자를 통한 기술과 재원투자> 생산비지불/판매권> 동독의 경쟁력 및 이익보장**
 - 대형 전기제철소(7천 DM)/화학공장12억DM
 - VW자동차 엔진생산공장(30만대 생산 10만대 서독에 판매)
- 서독/해외 3국과 합작투자: 수출 및 동독에 공급
- 서독: 동독에 원자재 공급> 가공후 서독에 재반입 또는 수출

- **상업차관 보증>반대급부로 정치& 사회·인도적 관계 개선**
 - 동독의 단기악성외채 상환을 위한 상업차관에 대한 보증> 동독대외 신용도 유지가능
 - 1983년 10억DM, 84년 9억 5천DM보증
 - 서독여행허가 및 체류한도 60/45일 연장/국경통행절차 및 국경통제 완화>인적 교류확대
 - 환경 문화 교육 분야의 협력강화 유인

3. 독일 통일의 교훈/사전대비

- 동독내 산업인프라 특히 교통인프라 지원
 - 베를린 왕복철도와 도로 수로 등 교통망 개선
 - 75년 베를린-헤름슈타트 78년 베를린-함부르크 고속도로 건설
 - 75년~89년간 약 30억마르크 /통일이후 약 3800억Euro를 SOC시설확충에 지원
 - ❖ **민간의 물류비용 감소효과와 그로 인한 경제협력 촉진**

- **통독 후 독일의 휴유증** 동독의 낮은 생산성(서독의 1/4수준)/ 사회주의적 사고> 기업가정신부족
 - 1대 1 환율 /가격자유화> 임금상승> 물가상승/수요하락> 기업도산/실업증가
 - 사회복지기금 확대로 독일 재정적자(02년 3.5%) > 경제성장률 (02년 0.2%, 03년 -0.1%) 최악 > EU경고수준*: 3년 연속 GDP 대비 3%를 초과시 제재(Stability and Growth 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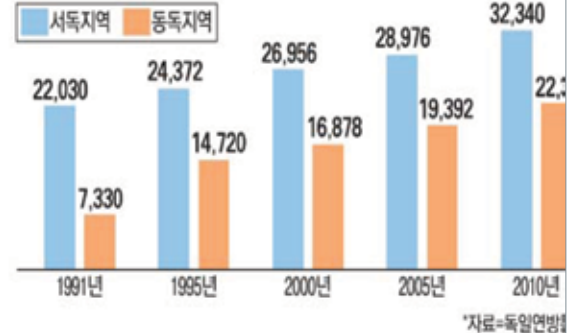
- ❖ **대북경협을 위한 시사점**
 - 지역경제 지원: 경제특구 지원
 - 기술혁신/ 직업교육 강화 /판촉 서비스정신 교육지도> 기업가 정신
 -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3. 독일 통일의 교훈/사전대비

▪ 1인당 국내총생산(GDP)

- 1991년 서독지역이 2만2030유로에서 2010년 3만2340유로로 46% 상승
- 동독지역은 7330유로에서 2만2384유로로 3배 증가
- 두 지역 간 격차는 통일 직후 3배에서 1.4배로 축소
- 고용율 73%내외
- 월소득 평균 통일전후 변화

동·서독 1인당 GDP 격차 얼마나 좁혀졌나 (단위=유로)



월소득	1990년	2011년
구동독	589 유로	1,416유로
구서독	1,148 유로	1,722 유로

4. 성공적인 대북경협 추진전략

대북경협의 실천 기본방향

- **정치안보와 분리** 원칙: 사적 경험분야: > 소통채널로 활용
*공적 지원분야: 정치(국가안전·비핵화 등)/인도적 차원의 진전고려
- **통일후 활용전략차원**>통일한국의 지속가능발전
- 단순 노동비 이용이 아닌 통일 후 비용절감 및 활용경제성 고려
- **발전단계별 점진적 추진**
- 성장기초: **SOC** : 철도> 도로> 항만개선 교통망 확보 > 민간기업의 투자유인
- 실천가능한 경제교류부터 추진, 지역별 산업별 우선순위 두어 전략적 추진
- 고부가가치 창출 혁신기술산업유치> 산업구조고도화 수준지원
- **인적 교류확대**
- 이산가족상봉 문화/체육, 학술교류 확대와 병행추진> 시너지 효과

4. 성공적인 대북경협 추진전략

대북경협의 실천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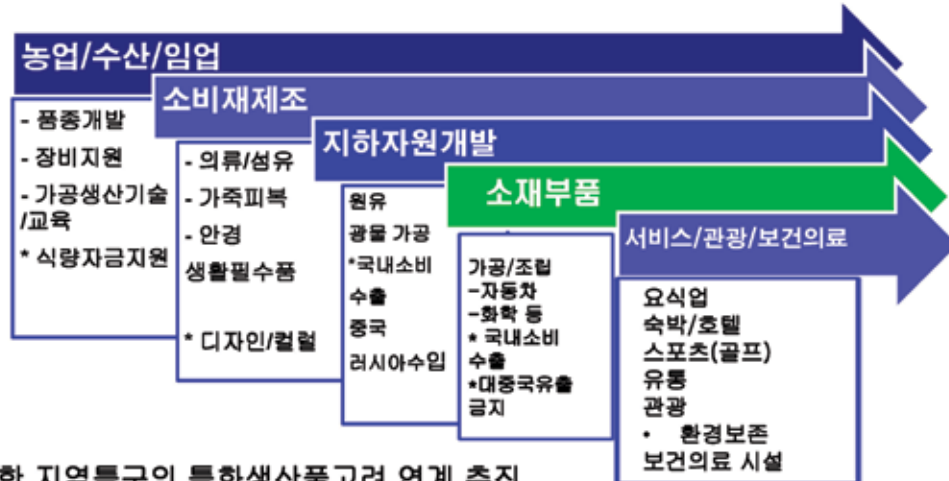
- **북한의 특화 장점 활용> 남북교역/수출지향**
 - 북한의 인건비와 지하자원의 활용 하되 전략차원의 활용
 - * 생산성 향상>교육, 지하자원 활용> 가공무역> 수출
- **국제금융 등 해외투자 유치로 다자간 협력**
 - 레버리지 효과> 보험기능
- **자본주의 및 거래윤리기반 원칙고수**
 - 사유재산 전제, 계약기반: 이익 등 자본의 자유이동, 손해보상에 관한 법제도
 - 지적재산권/산업비밀유지/개인정보보호
- **경협의 안정성 지속유지성**
 - 국제협약과 상관습과 상식에 기반한 협약 등 법적 보장
 - 협약체결>국제공증
 - 손해보상 관련 조정/재판관할 사전협의

4. 성공적인 대북경협 추진전략

- **인프라 확충지원**
 - 항만/철도> 고속도로 연계 또는 단계별로 확충> 투자 경제특구 중심
 - 동북아 물류: 중국 단둥-신의주/평양/남포/개성-서울
 - 유라시아 물류: 청진/원산/금강산-강원-울산-부산
 - 정보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
- **북한 내 개성공단 특구 활성화 및 제 2,3 특구개발**
 - IT등 첨단 혁신소재 제조/첨단기술 첨단기술 특구로 확산
 - 개성관광자원 연계 개발
 - **공동브랜드(Workpeace) 활성화> made in Korea** 원산지 한국추진
 - 북한 내륙: 평양 기존 공업지대 위주의 제 2/3공단추진
 - 노동/자본/수송인프라 & 판매시장 고려

4. 성공적인 대북경협 추진전략

■ 산업단계별 특구연계 경험추진



- 북한 지역특구의 특화생산품고려 연계 추진
- 비용대비 사업화 실현가능성
- 특허/디자인/생산기술/설비 제공
- 중국/러시아 등 원자재 구입/수출시장

4. 성공적인 대북경협 추진전략

- **내국거래협정 > 면세/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세**
 - 북한산 국내 기술 가공상품 > FTA체결국에 관세면세 등 확산협약
- **대기업 중소기업협회조직차원의 공동진출**
 - 북한당국에 공동대응 /리스크 감소
- **북한생산 및 제조설비의 국제임대/리스, 지급보증 추진**
 - 설비기계의 주인 : 해외금융기관
 - 북한의 경험차관등에 대한 지급보증
- **북한의 국제금융 및 무역기구, 국제개발기구 가입과 지원의 활용**
 - World Bank, IBRD, ADB, 국제 금융기구 등
 - ODA/UNIDO 등 국제산업개발지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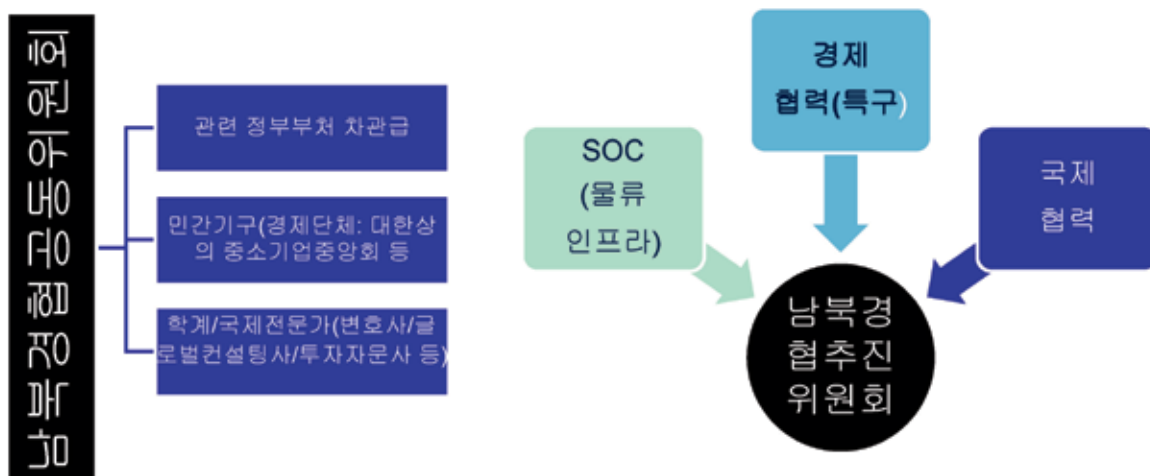
4. 성공적인 대북경협 추진전략

- 남북 청년창업프로젝트
 - 청년창업지원센터: 국내/해외 공동진출
 - 탈북자 창업컨설턴트로 배양
- 북한의 예술(영화/서커스 등)의 합작 상업화 추진
- 해외투자유치/국제전시회 등 공동참여
- 북한 관광자원 개발 및 환경보존사업
 - 금강산관광재개/개성 및 백두산 관광도 추진 > 요식산업 서비스 연계
 - 해외투자 펀딩을 위한 남북공동국제투자설명회 개최추진
 - * 안전보장/세제혜택/이익환수 자유보장
- UN /국제금융지원 DMZ 평화 및 환경생태공원

5. 대북경협 조직화방안

■ 남북경협공동위원회 구성: 기획/협약/조정통제

*2000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007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부총리급



5. 대북경협 조직화 방안

■ 남북경협자금 확대

통일연대세 신설

- 법인세/소득세(5% 부과)
- 년소득 1억 5천이상

* 통일채권발행

국내/글로벌
경협투자펀드

국제기구지원(ODA/UNIDO)
국제금융기관 차관

국내외 민간 차원
기부 및 투자

5. 대북경협 조직화 방안

■ 대북 청산계정 설정 활용

- 내국무역거래에 적용
- 기업-거래은행- 남한 중앙은행(청산거래)북한 중앙은행-거래은행-기업
- 외환거래율 고려 최적 교환비율적용
- 남북한에 구입자금 신용공여한도 설정 후 제공
- 년도별 남북거래액 유연적용

❖ 기여도

- 민족의 동질성 유지
- 교통, 통신, 왕래를 촉진하고 > 정부의 각종 통제조치의 완화
- 북한주민들의 호감을 유발
- 중국/러시아 경제권에 대한 의존도 최소화하여 통일 후 통합에 기여

5. 대북경협 조직화 방안

- **대북경협추진연구센터 운영**
- 경협자금에서 운영자금 총당
- 통일연구원내 특별 경협연구센터 추진
 - 국내외 경제연구원과의 협력추진



5. 대북경협 조직화 방안

- **해외 통일 경제네트워크 결성**
 - 세계한인무역협회 옥타(OKTA),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등을 연계하여 조직
 - 재외동포청년기업인 및 창업준비자를 대상>차세대무역스쿨>
한민족정체성 고양 및 무역실무 교육실시> 차세대 통일경제인 양성
 - 동포 대북경협 투자

❖ 한국이 북한 지역을 홍콩처럼 **특별 경제구역으로 설정해 1국 경제2체제로 지원하여 점진적 통일추진**>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경제 □
통인
포럼
2014년

Session 4

통일한국의 경제적 시너지효과는?

[Keynote Address 3]

류길재 통일부 장관

[Moderator]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Panelist]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원장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기섭 (주)에스엔지 대표이사, (사)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Keynote Address 3



류길재
통일부 장관

|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석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력

2013.01 – 2013.02 북한연구학회 회장
2010.12 – 2013.02 국가미래연구원 외교안보분과 회원
2010.03 – 2013.02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0.01 – 2010.12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통일분과위원장
2009.06 – 2013.02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2009.07 – 2011.0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2008.07 – 2011.02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정책자문위원
2005.03 – 2010.02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
2005.01 – 2005.12 북한연구학회 총무이사
2003.07 – 2005.0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1998.10 – 2005.02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조교수·부교수
1987.04 – 1998.09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연구위원

| 주요저서

2005 '남북한관계론' (共)
2003 '북한연구방법론' (共)

| 주요논문

2009 '북핵문제의 성격과 해결을 위한 전략 구상' (한국과 국제정치, 극동문제연구소)
1995 '北韓의 國家建設과 人民委員會의 役割' (박사학위논문)

Moderator



유 호 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학 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 박사
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고려대 정외과 졸업
경기고등학교 졸업

| 경 력

2014 - 현재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정치법제도분과위원장)
2014 -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유와창의교육원> 교수위원회 위원
2014 - 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상임위원
2013 -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제16기 정치안보국제분과위원장
2013 - 현재 통일부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위원
2013 - 현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장
2013 한국정치학회 회장
2012 - 현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자문위원
2012 - 현재 국방부 국방개혁위원
2012 - 현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2012 - 현재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상임대표
2011 - 현재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2010 - 현재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10 - 현재 (사)코리아정책연구원 원장
2010 - 2013.02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
2009 - 2013 민주평통 제14/15기 기획조정법제분과위원장
2009 - 2012.082 한중전문가공동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집행위원
2008 -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2013~ 회담분과자문위원장)
2008 북한연구학회 회장
2007 - 2011 경찰청 보안정책자문위원장
2006.02 - 2010.01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1999 - 현재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1991.04 - 1999.02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연구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통일정책실장 역임)

| 수 상

2013.12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 주요저서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한올아카데미, 2007, 공저)
북한연구의 성찰 (한올아카데미, 2005, 공저)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 좌절 (생각의 나무, 2005)
현대북한체제론 (을유문화사, 2000, 공저)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집문당, 2003, 공저)

Panelist



조 동 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원장

| 학 력

미국 펜실바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경 력

현재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교수

현재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현재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현재 북한경제포럼 회장

현재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1991- 2007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북한경제팀장, 기획조정실장

| 주요 연구분야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Panelist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학력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경제학 박사(Ph. D.)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중앙대학교 경제학 학사

| 경력

1997.12 –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01 – 현재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2013.03 – 현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2012.03 –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2009.03 – 2014.02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2003.08 – 2006.12	동북아시아위원회 전문위원
1997.08 – 1997.11	중앙대, 광주대 경제학과 강사
1996.08 – 1997.06	동국대 북한학과, 조선대 경제학과 강사

| 논문

박사학위 논문제목: North Korea's Foreign Trade, 1962–1992

Panelist



정 기 섭

(주)에스엔지 대표이사, (사)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 학 력

동국대 법정대 정치외교학과

| 경 력

2014.04 – 현재 (사)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2013.03 – 2014.03 (사)개성공단기업협회 수석부회장
 2008.07 – 현재 (주)에스엔지 개성공장 (연건평 4,500평) 준공
 2005.05 – 현재 금강이업종교류회 회장
 2002.07 – 현재 대전의류산업협회 회장
 1981.11 – 현재 (주)에스엔지 설립, 현 대표이사

| 수 상

2004.03.03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2001.04.02 노동부장관 표창

아시아경제 □
통인
포럼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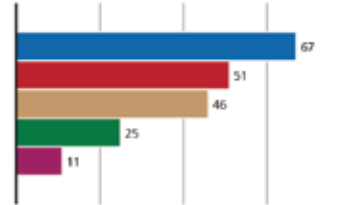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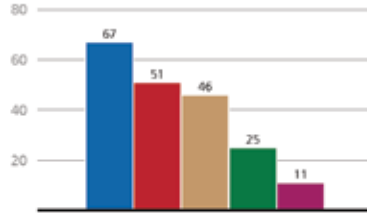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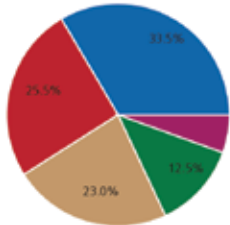
Survey

[개 요]

설문제목 통일, 기업에게 길을 묻다.

조사대상 사무/기술직 공무원 기능/작업직 자유/전문직 판매/
영업 서비스직 경영/관리직 20세~60세, 200명

1. 통일이 된다면 언제가 가장 격기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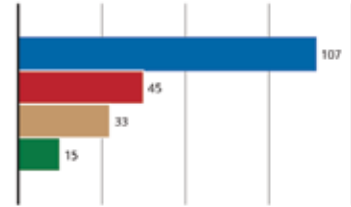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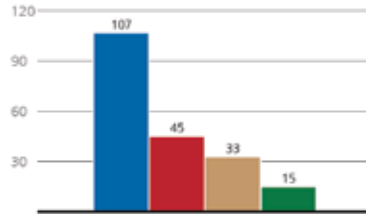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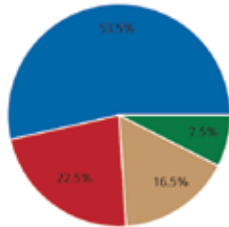
- 앞으로 20년 이상
- 앞으로 5년 이상 ~ 10년 미만
- 앞으로 10년 이상 ~ 15년 미만
- 앞으로 15년 이상 ~ 20년 미만
- 앞으로 5년 미만

구분	답안	남		여		20세 ~ 24세		25세 ~ 29세		30세 ~ 34세		35세 ~ 39세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앞으로 5년 미만	7.6	9	2.5	2	0.0	0	0.0	0	11.9	5	0.0	0
2	앞으로 5년 이상 ~ 10년 미만	27.7	33	22.2	18	0.0	0	14.9	7	21.4	9	27.3	6
3	앞으로 10년 이상 ~ 15년 미만	24.4	29	21.0	17	25.0	2	25.5	12	16.7	7	27.3	6
4	앞으로 15년 이상 ~ 20년 미만	11.8	14	13.6	11	12.5	1	12.8	6	9.5	4	18.2	4
5	앞으로 20년 이상	28.6	34	40.7	33	62.5	5	46.8	22	40.5	17	27.3	6
총합		100.0	119	100.0	81	100.0	8	100.0	47	100.0	42	100.0	22

구분	답안	40세 ~ 44세		45세 ~ 49세		50세 ~ 54세		55세 ~ 59세		판매/영업 서비스직		기능/작업직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앞으로 5년 미만	11.5	3	10.0	2	3.6	1	0.0	0	0.0	0	6.4	3
2	앞으로 5년 이상 ~ 10년 미만	26.9	7	30.0	6	46.4	13	42.9	3	25.0	1	23.4	11
3	앞으로 10년 이상 ~ 15년 미만	23.1	6	20.0	4	21.4	6	42.9	3	25.0	1	23.4	11
4	앞으로 15년 이상 ~ 20년 미만	15.4	4	15.0	3	10.7	3	0.0	0	0.0	0	23.4	11
5	앞으로 20년 이상	23.1	6	25.0	5	17.9	5	14.3	1	50.0	2	23.4	11
총합		100.0	26	100.0	20	100.0	28	100.0	7	100.0	4	100.0	47

구분	답안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자유/전문직		공무원		총	
		%	명	%	명	%	명	%	명	%	명
1	앞으로 5년 미만	3.4	4	13.3	4	0.0	0	0.0	0	5.5	11
2	앞으로 5년 이상 ~ 10년 미만	23.1	27	36.7	11	50.0	1	0.0	0	25.5	51
3	앞으로 10년 이상 ~ 15년 미만	19.7	23	36.7	11	0.0	0	0.0	0	23.0	46
4	앞으로 15년 이상 ~ 20년 미만	11.1	13	3.3	1	0.0	0	0.0	0	12.5	25
5	앞으로 20년 이상	42.7	50	10.0	3	50.0	1	0.0	0	33.5	67
총합		100.0	117	100.0	30	100.0	2	100.0	0	100.0	200

2. 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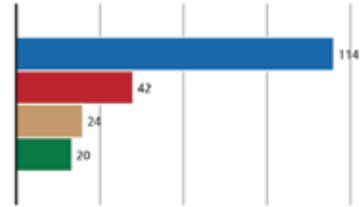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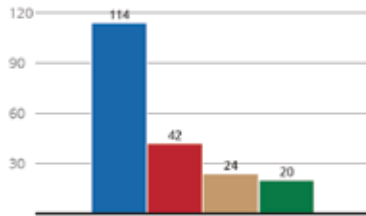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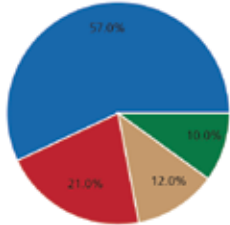
- 북한 정권의 붕괴
- 지속적인 남북교류
- 남한의 경제력 및 국방력
- 국민들의 통일 염원

이유	답안	남		여		20세 ~ 24세		25세 ~ 29세		30세 ~ 34세		35세 ~ 39세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남한의 경제력 및 국방력	14.3	17	19.8	16	37.5	3	17.0	8	14.3	6	4.5	1
2	국민들의 통일 염원	6.7	8	8.6	7	25.0	2	4.3	2	7.1	3	0.0	0
3	지속적인 남북교류	23.5	28	21.0	17	12.5	1	17.0	8	19.0	8	22.7	5
4	북한 정권의 붕괴	55.5	66	50.6	41	25.0	2	61.7	29	59.5	25	72.7	16
총합		100.0	119	100.0	81	100.0	8	100.0	47	100.0	42	100.0	22

이유	답안	40세 ~ 44세		45세 ~ 49세		50세 ~ 54세		55세 ~ 59세		판매/영업 서비스직		기능/작업직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남한의 경제력 및 국방력	26.9	7	20.0	4	7.1	2	28.6	2	75.0	3	19.1	9
2	국민들의 통일 염원	11.5	3	5.0	1	14.3	4	0.0	0	0.0	0	14.9	7
3	지속적인 남북교류	30.8	8	30.0	6	25.0	7	28.6	2	0.0	0	23.4	11
4	북한 정권의 붕괴	30.8	8	45.0	9	53.6	15	42.9	3	25.0	1	42.6	20
총합		100.0	26	100.0	20	100.0	28	100.0	7	100.0	4	100.0	47

이유	답안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자유/전문직		공무원		총	
		%	명	%	명	%	명	%	명	%	명
1	남한의 경제력 및 국방력	12.8	15	20.0	6	0.0	0	0.0	0	16.5	33
2	국민들의 통일 염원	6.0	7	3.3	1	0.0	0	0.0	0	7.5	15
3	지속적인 남북교류	22.2	26	26.7	8	0.0	0	0.0	0	22.5	45
4	북한 정권의 붕괴	59.0	69	50.0	15	100.0	2	0.0	0	53.5	107
총합		100.0	117	100.0	30	100.0	2	100.0	0	100.0	200

3. 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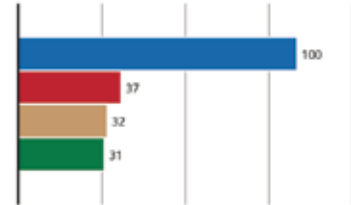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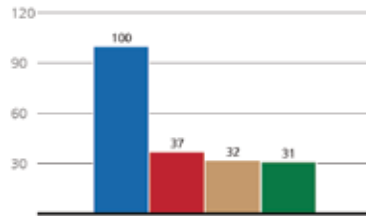
- 경제적 양극화 문제
- 남북 간 문화적 차이
- 남한 내 치안 등의 사회적 혼란
- 주변국에 의한 견제

구분	답안	남		여		20세 ~ 24세		25세 ~ 29세		30세 ~ 34세		35세 ~ 39세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경제적 양극화 문제	51.3	61	65.4	53	25.0	2	59.6	28	57.1	24	77.3	17
2	남북 간 문화적 차이	26.1	31	13.6	11	12.5	1	12.8	6	19.0	8	13.6	3
3	남한 내 치안 등의 사회적 혼란	9.2	11	16.0	13	50.0	4	12.8	6	16.7	7	9.1	2
4	주변국에 의한 견제	13.4	16	4.9	4	12.5	1	14.9	7	7.1	3	0.0	0
총합		100.0	119	100.0	81	100.0	8	100.0	47	100.0	42	100.0	22

구분	답안	40세 ~ 44세		45세 ~ 49세		50세 ~ 54세		55세 ~ 59세		판매/영업 서비스직		기능/작업직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경제적 양극화 문제	50.0	13	65.0	13	46.4	13	57.1	4	75.0	3	53.2	25
2	남북 간 문화적 차이	30.8	8	30.0	6	28.6	8	28.6	2	25.0	1	34.0	16
3	남한 내 치안 등의 사회적 혼란	11.5	3	0.0	0	3.6	1	14.3	1	0.0	0	8.5	4
4	주변국에 의한 견제	7.7	2	5.0	1	21.4	6	0.0	0	0.0	0	4.3	2
총합		100.0	26	100.0	20	100.0	28	100.0	7	100.0	4	100.0	47

구분	답안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자유/전문직		공무원		총	
		%	명	%	명	%	명	%	명	%	명
1	경제적 양극화 문제	61.5	72	46.7	14	0.0	0	0.0	0	57.0	114
2	남북 간 문화적 차이	15.4	18	23.3	7	0.0	0	0.0	0	21.0	42
3	남한 내 치안 등의 사회적 혼란	16.2	19	3.3	1	0.0	0	0.0	0	12.0	24
4	주변국에 의한 견제	6.8	8	26.7	8	100.0	2	0.0	0	10.0	20
총합		100.0	117	100.0	30	100.0	2	100.0	0	100.0	200

4. 통일이 미칠 중국 및 일본과의 통상 및 산업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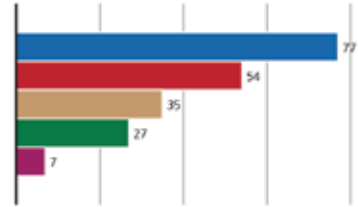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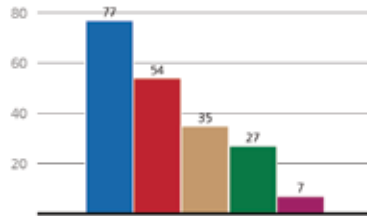
- 3국 모두 이익
- 통일 한국만 이익
- 3국 모두 불이익
- 중국 및 일본만 이익

연도	답안	남		여		20세 ~ 24세		25세 ~ 29세		30세 ~ 34세		35세 ~ 39세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3국 모두 이익	63.0	75	30.9	25	37.5	3	46.8	22	38.1	16	54.5	12
2	통일 한국만 이익	17.6	21	19.8	16	25.0	2	14.9	7	21.4	9	22.7	5
3	중국 및 일본만 이익	11.8	14	21.0	17	12.5	1	21.3	10	14.3	6	18.2	4
4	3국 모두 불이익	7.6	9	28.4	23	25.0	2	17.0	8	26.2	11	4.5	1
총합		100.0	119	100.0	81	100.0	8	100.0	47	100.0	42	100.0	22

연도	답안	40세 ~ 44세		45세 ~ 49세		50세 ~ 54세		55세 ~ 59세		판매/영업 서비스직		기능/작업직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3국 모두 이익	46.2	12	60.0	12	71.4	20	42.9	3	75.0	3	51.1	24
2	통일 한국만 이익	26.9	7	20.0	4	3.6	1	28.6	2	25.0	1	14.9	7
3	중국 및 일본만 이익	3.8	1	15.0	3	17.9	5	14.3	1	0.0	0	12.8	6
4	3국 모두 불이익	23.1	6	5.0	1	7.1	2	14.3	1	0.0	0	21.3	10
총합		100.0	26	100.0	20	100.0	28	100.0	7	100.0	4	100.0	47

연도	답안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자유/전문직		공무원		총	
		%	명	%	명	%	명	%	명	%	명
1	3국 모두 이익	44.4	52	70.0	21	0.0	0	0.0	0	50.0	100
2	통일 한국만 이익	20.5	24	16.7	5	0.0	0	0.0	0	18.5	37
3	중국 및 일본만 이익	17.1	20	10.0	3	100.0	2	0.0	0	15.5	31
4	3국 모두 불이익	17.9	21	3.3	1	0.0	0	0.0	0	16.0	32
총합		100.0	117	100.0	30	100.0	2	100.0	0	100.0	200

5. 통일이 된 이후 한국 기업들은 이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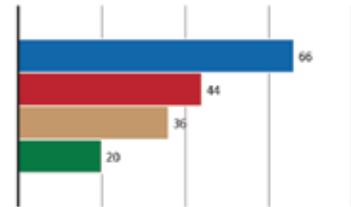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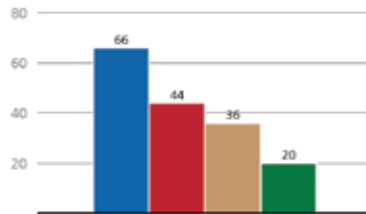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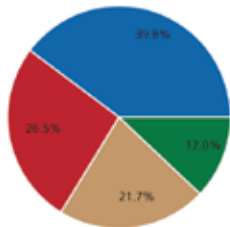
- 그렇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연도	답안	남		여		20세 ~ 24세		25세 ~ 29세		30세 ~ 34세		35세 ~ 39세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매우 그렇다	22.7	27	9.9	8	0.0	0	14.9	7	11.9	5	13.6	3
2	그렇다	45.4	54	28.4	23	25.0	2	27.7	13	35.7	15	45.5	10
3	보통이다	21.8	26	34.6	28	25.0	2	34.0	16	35.7	15	36.4	8
4	그렇지 않다	9.2	11	19.8	16	25.0	2	19.1	9	11.9	5	4.5	1
5	전혀 그렇지 않다	0.8	1	7.4	6	25.0	2	4.3	2	4.8	2	0.0	0
총합		100.0	119	100.0	81	100.0	8	100.0	47	100.0	42	100.0	22

연도	답안	40세 ~ 44세		45세 ~ 49세		50세 ~ 54세		55세 ~ 59세		판매/영업 서비스직		기능/작업직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매우 그렇다	15.4	4	40.0	8	21.4	6	28.6	2	50.0	2	12.8	6
2	그렇다	53.8	14	45.0	9	35.7	10	57.1	4	25.0	1	46.8	22
3	보통이다	19.2	5	10.0	2	21.4	6	0.0	0	25.0	1	19.1	9
4	그렇지 않다	7.7	2	5.0	1	21.4	6	14.3	1	0.0	0	17.0	8
5	전혀 그렇지 않다	3.8	1	0.0	0	0.0	0	0.0	0	0.0	0	4.3	2
총합		100.0	26	100.0	20	100.0	28	100.0	7	100.0	4	100.0	47

연도	답안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자유/전문직		공무원		총	
		%	명	%	명	%	명	%	명	%	명
1	매우 그렇다	17.1	20	23.3	7	0.0	0	0.0	0	17.5	35
2	그렇다	32.5	38	50.0	15	50.0	1	0.0	0	38.5	77
3	보통이다	32.5	38	16.7	5	50.0	1	0.0	0	27.0	54
4	그렇지 않다	13.7	16	10.0	3	0.0	0	0.0	0	13.5	27
5	전혀 그렇지 않다	4.3	5	0.0	0	0.0	0	0.0	0	3.5	7
총합		100.0	117	100.0	30	100.0	2	100.0	0	100.0	200

6. 한국 기업들에게 이득이 되는 요인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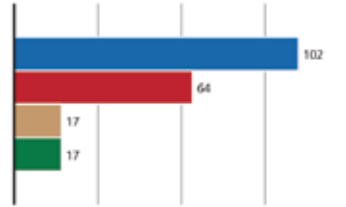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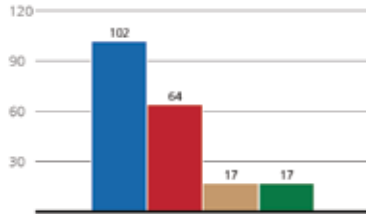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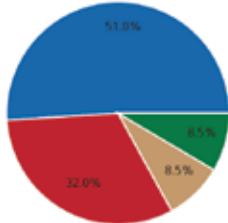
- 다양한 개발거리
- 값싼 노동력
- 무한한 자원
- 외국자본 투자유치 용이

구분	답안	남		여		20세 ~ 24세		25세 ~ 29세		30세 ~ 34세		35세 ~ 39세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다양한 개발거리	38.3	41	42.4	25	50.0	2	41.7	15	34.3	12	42.9	9
2	무한한 자원	22.4	24	20.3	12	0.0	0	25.0	9	22.9	8	19.0	4
3	값싼 노동력	26.2	28	27.1	16	50.0	2	25.0	9	28.6	10	23.8	5
4	외국자본 투자유치 용이	13.1	14	10.2	6	0.0	0	8.3	3	14.3	5	14.3	3
5	기타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총합		100.0	107	100.0	59	100.0	4	100.0	36	100.0	35	100.0	21

구분	답안	40세 ~ 44세		45세 ~ 49세		50세 ~ 54세		55세 ~ 59세		판매/영업 서비스직		기능/작업직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다양한 개발거리	47.8	11	36.8	7	31.8	7	50.0	3	50.0	2	27.0	10
2	무한한 자원	13.0	3	21.1	4	31.8	7	16.7	1	0.0	0	37.8	14
3	값싼 노동력	26.1	6	31.6	6	27.3	6	0.0	0	50.0	2	18.9	7
4	외국자본 투자유치 용이	13.0	3	10.5	2	9.1	2	33.3	2	0.0	0	16.2	6
5	기타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총합		100.0	23	100.0	19	100.0	22	100.0	6	100.0	4	100.0	37

구분	답안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자유/전문직		공무원		총	
		%	명	%	명	%	명	%	명	%	명
1	다양한 개발거리	42.7	41	44.4	12	50.0	1	0.0	0	39.8	66
2	무한한 자원	16.7	16	18.5	5	50.0	1	0.0	0	21.7	36
3	값싼 노동력	30.2	29	22.2	6	0.0	0	0.0	0	26.5	44
4	외국자본 투자유치 용이	10.4	10	14.8	4	0.0	0	0.0	0	12.0	20
5	기타	0.0	0	0.0	0	0.0	0	0.0	0	0.0	0
총합		100.0	96	100.0	27	100.0	2	100.0	0	100.0	166

7.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특화하기에 적합 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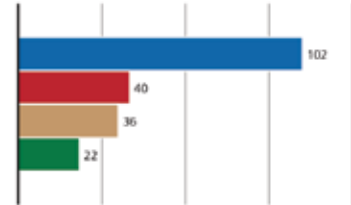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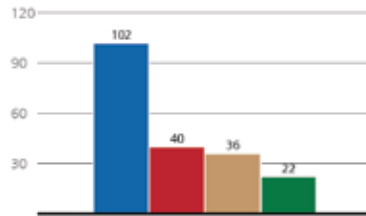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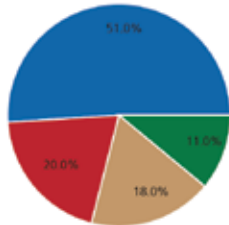
- 조선, 철강, 건설
- 섬유, 경유, 화학
- 전자전기 및 정보통신(IT)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연도	답안	남		여		20세 ~ 24세		25세 ~ 29세		30세 ~ 34세		35세 ~ 39세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전자전기 및 정보통신(IT)	11.8	14	3.7	3	12.5	1	4.3	2	9.5	4	13.6	3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10.9	13	4.9	4	12.5	1	6.4	3	9.5	4	13.6	3
3	섬유, 경유, 화학	27.7	33	38.3	31	50.0	4	31.9	15	33.3	14	27.3	6
4	조선, 철강, 건설	49.6	59	53.1	43	25.0	2	57.4	27	47.6	20	45.5	10
총합		100.0	119	100.0	81	100.0	8	100.0	47	100.0	42	100.0	22

연도	답안	40세 ~ 44세		45세 ~ 49세		50세 ~ 54세		55세 ~ 59세		판매/영업 서비스직		기능/작업직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전자전기 및 정보통신(IT)	11.5	3	5.0	1	7.1	2	14.3	1	25.0	1	12.8	6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7.7	2	0.0	0	10.7	3	14.3	1	0.0	0	10.6	5
3	섬유, 경유, 화학	34.6	9	30.0	6	32.1	9	14.3	1	0.0	0	36.2	17
4	조선, 철강, 건설	46.2	12	65.0	13	50.0	14	57.1	4	75.0	3	40.4	19
총합		100.0	26	100.0	20	100.0	28	100.0	7	100.0	4	100.0	47

번호	답안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자유/전문직		공무원		총	
		%	명	%	명	%	명	%	명	%	명
1	전자전기 및 정보통신(IT)	6.8	8	6.7	2	0.0	0	0.0	0	8.5	17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6.8	8	10.0	3	50.0	1	0.0	0	8.5	17
3	섬유, 경유, 화학	33.3	39	26.7	8	0.0	0	0.0	0	32.0	64
4	조선, 철강, 건설	53.0	62	56.7	17	50.0	1	0.0	0	51.0	102
총합		100.0	117	100.0	30	100.0	2	100.0	0	100.0	200

8. 통일 후 한국 기업이 가장 고민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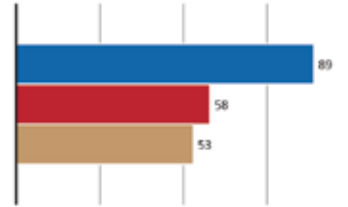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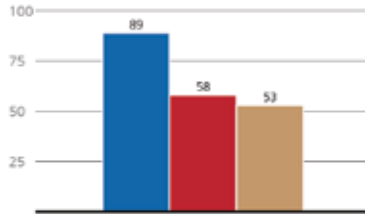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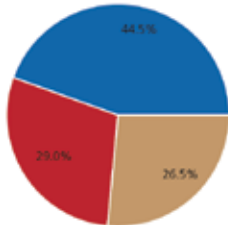
- 채용확대 후 이뤄지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 신규 투자 아이템
- 투자유치
- 채용확대

번호	답안	남		여		20세 ~ 24세		25세 ~ 29세		30세 ~ 34세		35세 ~ 39세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신규 투자 아이템	23.5	28	14.8	12	25.0	2	14.9	7	7.1	3	22.7	5
2	투자유치	18.5	22	17.3	14	12.5	1	29.8	14	7.1	3	22.7	5
3	채용확대	12.6	15	8.6	7	0.0	0	19.1	9	11.9	5	4.5	1
4	채용확대 후 이뤄지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45.4	54	59.3	48	62.5	5	36.2	17	73.8	31	50.0	11
총합		100.0	119	100.0	81	100.0	8	100.0	47	100.0	42	100.0	22

번호	답안	40세 ~ 44세		45세 ~ 49세		50세 ~ 54세		55세 ~ 59세		판매/영업 서비스직		기능/작업직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신규 투자 아이템	23.1	6	30.0	6	32.1	9	28.6	2	25.0	1	23.4	11
2	투자유치	19.2	5	10.0	2	21.4	6	0.0	0	25.0	1	17.0	8
3	채용확대	7.7	2	5.0	1	14.3	4	0.0	0	0.0	0	12.8	6
4	채용확대 후 이뤄지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50.0	13	55.0	11	32.1	9	71.4	5	50.0	2	46.8	22
총합		100.0	26	100.0	20	100.0	28	100.0	7	100.0	4	100.0	47

번호	답안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자유/전문직		공무원		총	
		%	명	%	명	%	명	%	명	%	명
1	신규 투자 아이템	17.9	21	23.3	7	0.0	0	0.0	0	20.0	40
2	투자유치	20.5	24	10.0	3	0.0	0	0.0	0	18.0	36
3	채용확대	12.0	14	6.7	2	0.0	0	0.0	0	11.0	22
4	채용확대 후 이뤄지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49.6	58	60.0	18	100.0	2	0.0	0	51.0	102
총합		100.0	117	100.0	30	100.0	2	100.0	0	100.0	200

9. 통일이 되면 귀하께서 재직하고 계신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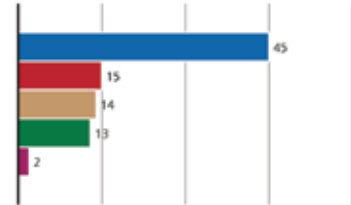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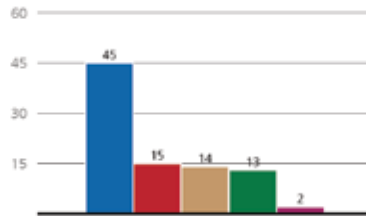
- 투자할 것 같다
- 생각해보지 않았다.
-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번호	답안	남		여		20세 ~ 24세		25세 ~ 29세		30세 ~ 34세		35세 ~ 39세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투자할 것 같다	53.8	64	30.9	25	25.0	2	31.9	15	35.7	15	63.6	14
2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22.7	27	32.1	26	25.0	2	36.2	17	26.2	11	13.6	3
3	생각해보지 않았다.	23.5	28	37.0	30	50.0	4	31.9	15	38.1	16	22.7	5
총합		100.0	119	100.0	81	100.0	8	100.0	47	100.0	42	100.0	22

번호	답안	40세 ~ 44세		45세 ~ 49세		50세 ~ 54세		55세 ~ 59세		판매/영업 서비스직		기능/작업직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투자할 것 같다	53.8	14	40.0	8	57.1	16	71.4	5	100.0	4	46.8	22
2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30.8	8	15.0	3	25.0	7	28.6	2	0.0	0	25.5	12
3	생각해보지 않았다.	15.4	4	45.0	9	17.9	5	0.0	0	0.0	0	27.7	13
총합		100.0	26	100.0	20	100.0	28	100.0	7	100.0	4	100.0	47

번호	답안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자유/전문직		공무원		총	
		%	명	%	명	%	명	%	명	%	명
1	투자할 것 같다	38.5	45	60.0	18	0.0	0	0.0	0	44.5	89
2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29.1	34	20.0	6	50.0	1	0.0	0	26.5	53
3	생각해보지 않았다.	32.5	38	20.0	6	50.0	1	0.0	0	29.0	58
총합		100.0	117	100.0	30	100.0	2	100.0	0	100.0	200

10. 귀하께서 재직 중인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100억 내외
- 5,000억 이상
- 1,000억 내외
- 500억 내외
- 3,000억 내외

번호	답안	남		여		20세 ~ 24세		25세 ~ 29세		30세 ~ 34세		35세 ~ 39세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100억 내외	46.9	30	60.0	15	100.0	2	46.7	7	46.7	7	28.6	4
2	500억 내외	15.6	10	12.0	3	0.0	0	20.0	3	13.3	2	7.1	1
3	1,000억 내외	14.1	9	20.0	5	0.0	0	13.3	2	13.3	2	35.7	5
4	3,000억 내외	3.1	2	0.0	0	0.0	0	6.7	1	0.0	0	0.0	0
5	5,000억 이상	20.3	13	8.0	2	0.0	0	13.3	2	26.7	4	28.6	4
총합		100.0	64	100.0	25	100.0	2	100.0	15	100.0	15	100.0	14

번호	답안	40세 ~ 44세		45세 ~ 49세		50세 ~ 54세		55세 ~ 59세		판매/영업 서비스직		기능/작업직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100억 내외	64.3	9	62.5	5	50.0	8	60.0	3	25.0	1	54.5	12
2	500억 내외	14.3	2	12.5	1	18.8	3	20.0	1	50.0	2	27.3	6
3	1,000억 내외	14.3	2	12.5	1	12.5	2	0.0	0	0.0	0	4.5	1
4	3,000억 내외	0.0	0	0.0	0	6.3	1	0.0	0	0.0	0	0.0	0
5	5,000억 이상	7.1	1	12.5	1	12.5	2	20.0	1	25.0	1	13.6	3
총합		100.0	14	100.0	8	100.0	16	100.0	5	100.0	4	100.0	22

번호	답안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자유/전문직		공무원		총	
		%	명	%	명	%	명	%	명	%	명
1	100억 내외	48.9	22	55.6	10	0.0	0	0.0	0	50.6	45
2	500억 내외	8.9	4	5.6	1	0.0	0	0.0	0	14.6	13
3	1,000억 내외	20.0	9	22.2	4	0.0	0	0.0	0	15.7	14
4	3,000억 내외	2.2	1	5.6	1	0.0	0	0.0	0	2.2	2
5	5,000억 이상	20.0	9	11.1	2	0.0	0	0.0	0	16.9	15
총합		100.0	45	100.0	18	100.0	0	100.0	0	100.0	89



※ 협찬사 로고 가나다 순 기재

아시아경제가 대한민국 언론의 비전입니다

온오프·편잡기획의 강자..새 시대, 새 미디어를 여는窓



아시아경제 □
통인
포럼
2014년